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05.



kip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본 보고서는 2025년 2월 IMF에서 발표한
“IMF Country Report No. 25/41—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와 “IMF Country Report No. 25/42—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김정환 재정제도분석팀장
장준희 선임연구원
하에스더 선임연구원
김도현 위촉연구원

Contents

I	이사회 의결문	1
II	협의단 보고서	5
	1. 배경	5
	2. 최근 경제 동향	6
	3. 전망 및 위험	14
	4. 정책 논의	17
	가. 재정 완충여력 재건 시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17
	나. 구조적 전환 속 경제성장 지속	25
	다. 장기적 과제에 대한 회복력 구축	37
	5. 협의단 평가	47

Ⅲ	한국 담당 이사 입장문	52
Ⅳ	주요 쟁점- 미래 전환: AI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58
	1. 서론	58
	2. AI 도입	61
	3. AI와 노동시장	64
	4. AI, 생산성과 산출	71
	5. AI 준비 수준	80
	6. 결론	84
Ⅴ	주요 쟁점- 변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 속의 한국	86
	1. 서론	86
	2. 미-중 무역 관계 변화	89
	3. 산업정책과 한국의 전략 산업	92
	4. 정책	96

I 이사회 의결문(보도자료)

1. IMF 상임이사회, 한국과의 2024년 연례협의 의결

- 튼튼한 경제 기초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이 최근 수년 동안 한국 경제가 여러 충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
 - 경제성장이 2023년에 있었던 급격한 둔화에서 회복되었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금융안정성 위험도 감소함
 - 물가상승과 금융안정성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당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함
- 한국 경제는 2025년 잠재성장률 수준에 달하는 성장과 목표에 근접한 물가상승으로 광범위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출에 힘입어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이 2.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내수가 점차 강화되고 수출 증가세가 정상화되면서 약 2% 수준의 추세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은 세계 공급망 마찰 해소,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2024년 12월, 1.9%로 하락하였음
 - 아웃풋 갭(output gap)¹⁾이 줄어들에 따라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회복 덕분에 2024년에 크게 개선되었음
 -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 강화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

1) GDP 갭(GDP gap)이라고도 하며,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의미함.

○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며, 하방 위험이 우세함**

-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세계 반도체 수요 둔화, 세계 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가,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방 위험이 증가함

2. 상임이사회 의결문

○ **IMF 상임이사회는 협의단 평가의 주요 내용에 동의함**

- 물가상승과 금융안정성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함
- 상임이사회는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와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하방 위험이 증가했음을 주목함
- 단기 정책이 완충여력을 재건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또한 구조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도전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 중인 점을 환영하며, 통화정책이 앞으로도 기민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함

○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계획을 지지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야심찬 중기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고령화 관련 지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혁, 재정준칙 도입, 그리고 세수 확충 및 에너지보조금을 비롯한 지출 합리화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장함
-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안정성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비은행금융기관(NBFIs)의 자산건전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의 금융 취약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태세를 갖출 것을 권고함
 - 당국은 주택시장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개선하는 조치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가로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한편,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을 촉구함
 - 한국의 노동력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를 주요 과제로 지적하며, 청년층 소득 향상,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재 유치를 권고함
 - 최근 도입된 외환 및 자본시장 개혁을 환영하며,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 부채(private debt)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줄여 자본 배분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함
 - 또한 서비스 및 중소기업(SME) 부문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증대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함
 - 혁신 촉진, 규제 간소화, 수출 및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서비스업 수출 증진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응할 것을 권고함
 - AI 도입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타기팅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의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환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관된 기후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IMF 협정 제4조에 의거한 다음 연례협의는 통상적인 12개월 주기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표 1-1〉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2022-2025년

(단위: %, 조원, 10억달러)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증가율 (전년 대비 % 변화)	2.7	1.4	2.2	2.0
국내 총수요	2.8	1.4	0.8	1.5
최종 국내 수요	2.8	1.6	0.9	1.5
소비	4.2	1.6	1.3	1.7
총 고정자산투자	-0.2	1.4	0.0	1.0
재고변동	0.5	0.0	-0.7	0.0
순수출	0.1	0.2	1.2	0.7
명목GDP (조원)	2,324	2,401	2,532	2,640
저축 및 투자 (GDP 대비 %)				
국민총저축	34.4	34.2	34.5	34.9
국내총투자	33.3	32.3	30.3	31.3
경상수지	1.4	1.9	4.2	3.6
물가 (전년 대비 % 변화)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말 기준)	5.0	3.2	1.9	2.0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평균)	5.1	3.6	2.3	2.0
근원 물가상승률 (연평균)	3.6	3.4	2.2	2.0
GDP 디플레이터	1.8	1.9	3.1	2.2
실질 실효환율 변화율	-5.3	2.3
무역 (전년 대비 % 변화)				
수출 물량	1.8	1.0	6.2	4.0
수입 물량	4.4	-3.9	2.6	2.8
통합 중앙정부 재정 (GDP 대비 %)				
수입	25.2	22.5	22.3	22.9
지출	26.7	23.2	22.9	23.2
순융자(+)/순차입(-)	-1.5	-0.7	-0.6	-0.3
통합재정수지	-2.8	-1.5	-1.5	-1.2
사회보장기금 제외 수지	-5.0	-3.6	-3.6	-3.2
중앙정부 부채	44.5	45.5	46.8	48.1
통화 및 신용 (기말 기준)				
콜금리	3.4	3.9	3.3	...
회사채(3년 AA) 수익률	5.2	3.9	3.3	...
M3 증가율	4.1	4.2
국제수지 (미화 10억달러)				
수출 (FOB 기준)	694.3	645.0	709.9	744.5
수입 (FOB 기준)	678.7	611.0	619.8	663.8
경상수지	25.8	35.5	79.1	68.7
외환보유액 (기말 기준)	418.4	415.4	411.1	409.4
단기 외채 대비 비율 (만기 1년 이내)	184.0	214.1	212.4	209.0
대외부채				
총 대외부채 (GDP 대비 %)	39.7	36.6	37.3	38.7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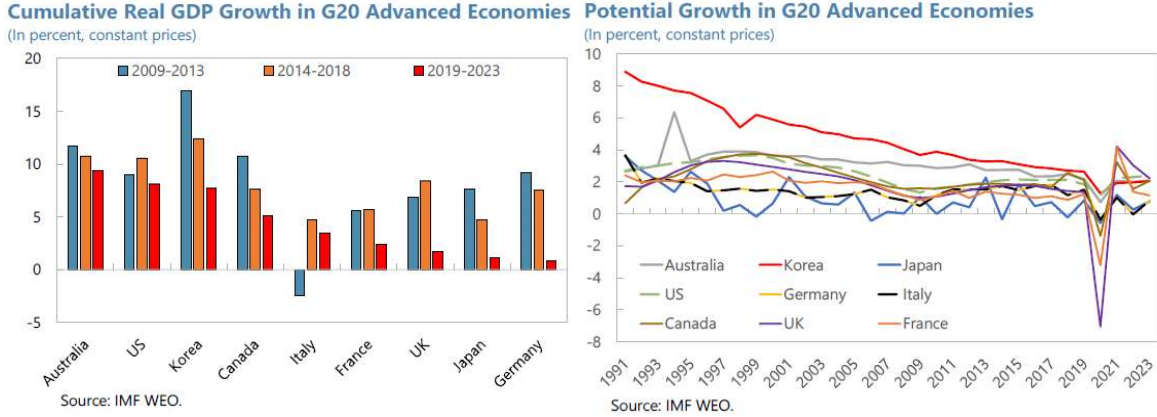
II 협의단 보고서

1. 배경

- **한국 경제는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음**
 - 튼튼한 경제 기반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덕분에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장 스트레스 사례들, 국내 주택시장 조정 등 다양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옴
 - 2023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금융안정성 위험이 줄어들었음
 - 지난 연례협의 이후 한국 정부 당국의 정책은 협의단이 권고한 내용(원문의 Annex I 참고)과 대체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전 세계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장 활성화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둔화되었음
 - 향후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 지리적·경제적 분절(GEF)로 인한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 AI 도입을 포함한 혁신적 기술 변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성 등에서 기인한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은 구조개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역동경제 로드맵(Dynamic Economy Roadmap, DER)"을 발표함
 -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구조개혁 및 기타 개혁 추진이 더 어려워진 상황임

[그림 II-1] 구조적 둔화 속 성장의 회복력

(단위: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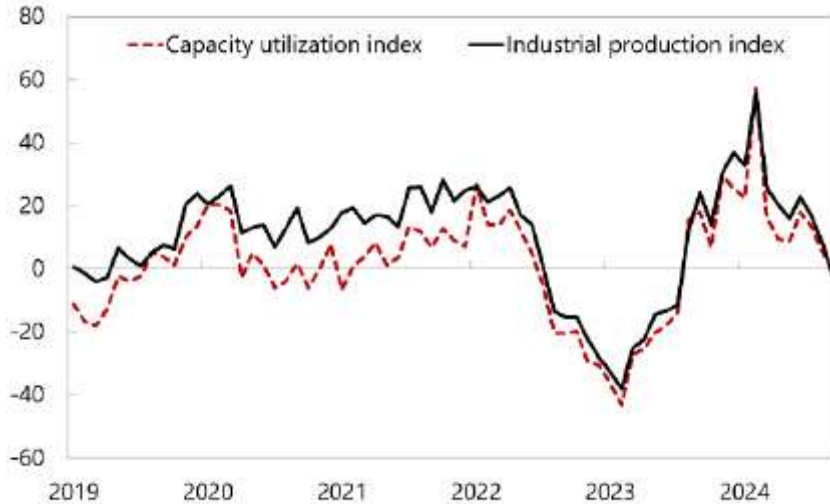
2. 최근 경제 동향

○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회복하는 중임

- 실질 GDP 성장률이 2023년에 1.4%를 기록한 이후 2024년 상반기에 2.7%(전년 동기 대비, 계절 조정)로 반등했으나, 2024년 3분기에는 1.5%(전년 동기 대비)로 둔화되었음
 - 이러한 둔화는 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자동차 업계 파업과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임
 - 국내 수요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민간 부문 부채 증가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저조하여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함
-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개선되어 2024년 경제성장률이 2.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세계 공급망 마찰 해소,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을 반영하듯 2023년 전체 평균 3.6%에서 2024년 12월 기준 1.9%(전년 동기 대비)로 하락하였음
 - 임금상승률은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통 수준을 유지함
 - 2024년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3%이었음

[그림 II-2] 반도체 생산 및 설비 가동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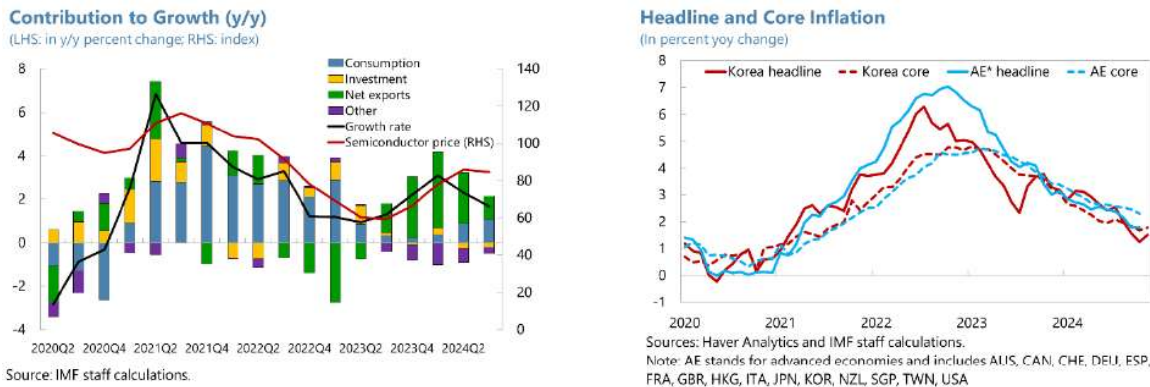


Sources: Haver Analytics and IMF staff calculations.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5

[그림 II-3]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단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지수)



Sources: Haver Analytics and IMF staff calculations.
Note: AE stands for advanced economies and includes AUS, CAN, CHE, DEU, ESP, FRA, GBR, HKG, ITA, JPN, KOR, NZL, SGP, TW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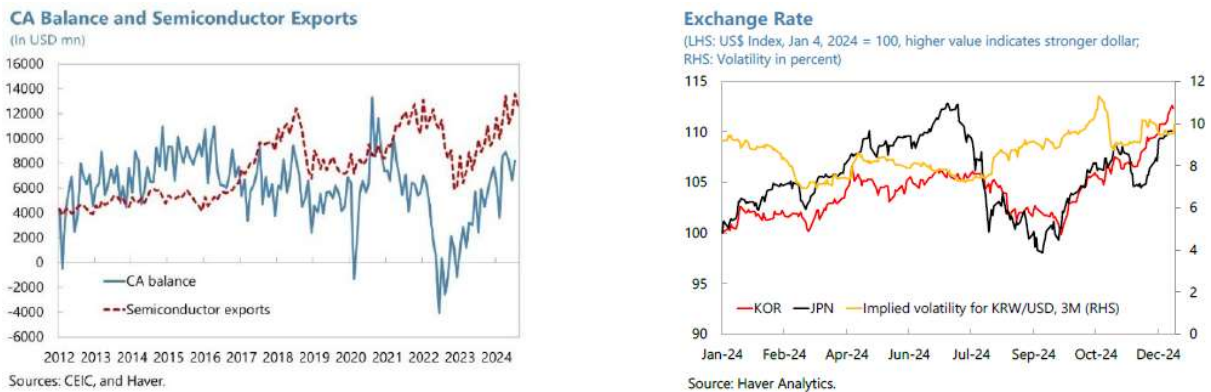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5

○ 대외 부문의 성과는 세계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개선되었음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GDP의 1.9%에서 2024년 3분기까지 연간 GDP의 3.5%로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반도체 부문이 주도한 수출 호조세 회복에 기인함
 -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입 증가세는 예상보다 더딤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4년에 GDP의 4.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사전 평가(preliminary assessment)에 따르면, 2024년 대외 부문의 성과는 중기 경제 기초여건과 정책 권고사항(원문의 Annex III 참고)으로부터 도출된 수준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달러화 강세, 그리고 국내 정치적 상황이 한국의 원화 가치 변동성을 증가시킴
 - 2024년 한국의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약 12.5% 절하하였으며, 그중 약 5.3%는 국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한 12월에 기록되었음
 - 실질 실효 환율은 2023년에 2.3% 상승한 후 2024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함
 - 2024년 상반기 원화 가치의 절하 압력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은 현물 시장에 개입(2024년 3분기까지 순매도액 74억달러 기록)하는 한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 간의 외환 스왑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음

[그림 II-4] 경상수지 및 환율 변화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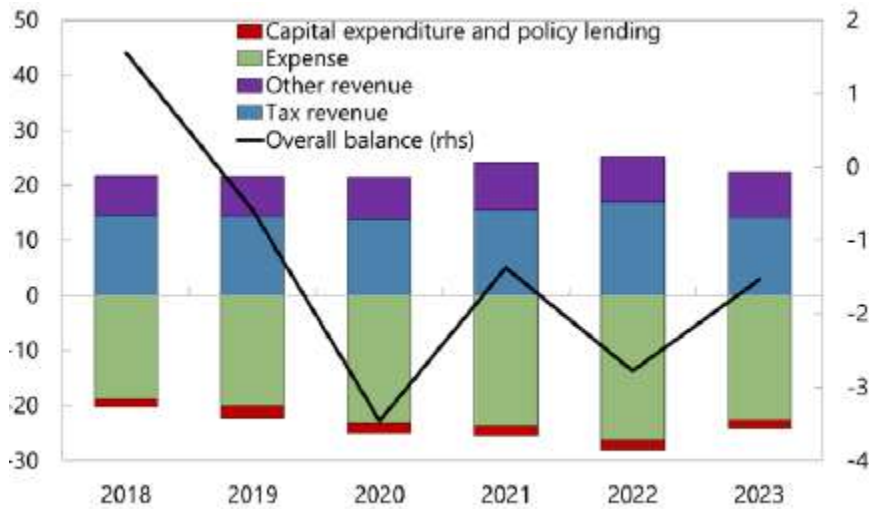
○ 지속적인 세수 부족이 재정건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상당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지출로 2023년에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됨
- 2023년 기업 수익성 약화의 영향과 부동산 시장 가치 하락으로 2024년에도 세수 부진이 이어졌고, 한국 정부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예산 대비 약 29.6조원(GDP의 1.2%)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지속하려는 당국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는 2024년에 GDP의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 순환을 감안한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수준(GDP의 0.7%)에 가까워 중립적인 재정 기조로 나타남

- 당국은 추가 채권 발행 없이 공적 자금을 활용하고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을 비롯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을 해결함

[그림 II-5]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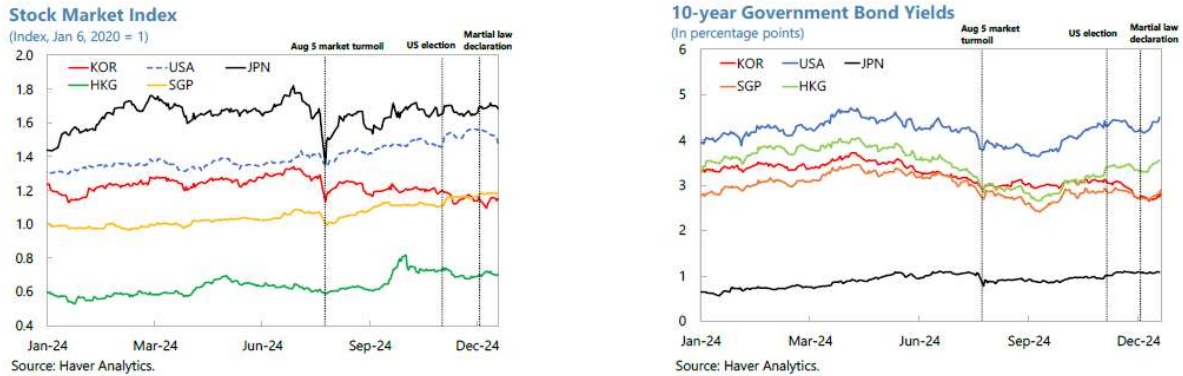
Sources: Haver, CEIC, and IMF staff calculations.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6

○ 금융안정성 위험은 감소했지만, 취약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경기 회복, 완화된 금융여건, 완화된 통화정책, 그리고 타기팅된 금융 정책 대응이 금융안정성 위험을 줄였음
- 금융 시스템의 상당한 완충여력, 엄격한 건전성 요건, 그리고 당국의 신속한 정책 개입 준비태세를 고려했을 때, 금융안정성 위험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의 변화와 같은 세계적 요인, 혹은 보다 최근인 12월 초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의 영향으로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증가하였음
 - 하지만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환매조건부 채권 매입)과 금융 당국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시장이 안정되어 최근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주식 및 채권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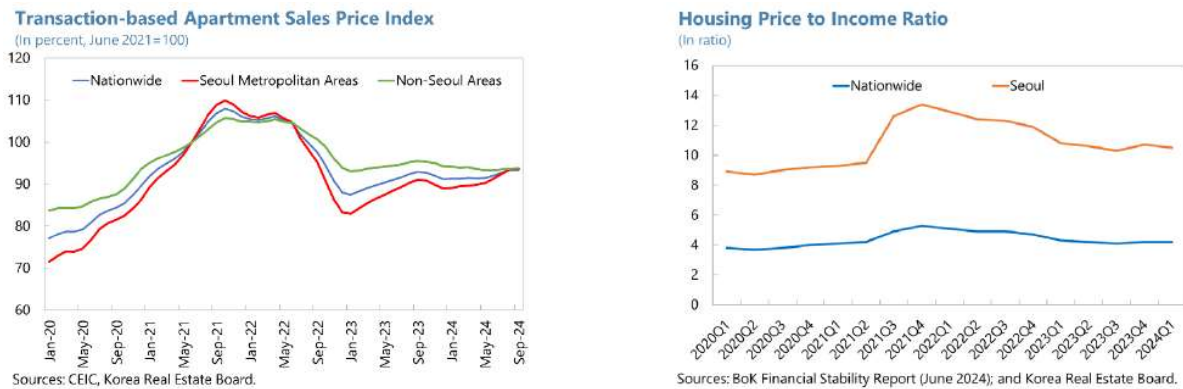
[그림 II-6] 금융시장 변화 추이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7

-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한 과대평가 징후도 줄어들고, 재무 압박을 받게 된 일부 신용협동조합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구조조정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 제약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음
- 이에 대응하여 당국은 금융 건전성 조치와 공급 측면의 대책을 시행하였고, 2024년 9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되었음
- * 주택 구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우며, 특히 서울 지역의 여건은 더 열악한 상황임

[그림 II-7] 주택시장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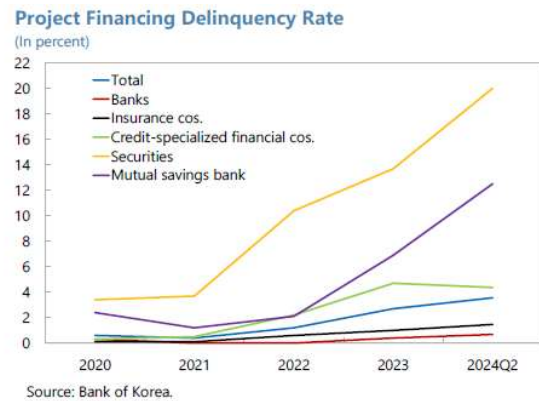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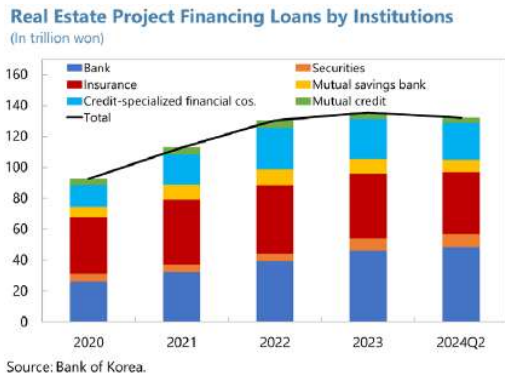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7

- 2022년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나타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험은 포괄적인 연락처 조치(〈표 II-1〉)를 통해 완화됨
-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약 9.7% 또는 GDP의 0.8%에 해당하는 약 21조원 규모의 부실 PF가 2024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의 지도 아래 구조조정 되고 있음

- 일부 비은행금융기관(NBFIs)²⁾의 자산 건전성 악화, 특히 PF 관련 부실채권(NPL)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음
 - 그러나 자본 비율이 여전히 규제 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 당국이 부실 PF 익스포처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기관리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 당국은 최근 두 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함

[그림 II-8]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비은행금융기관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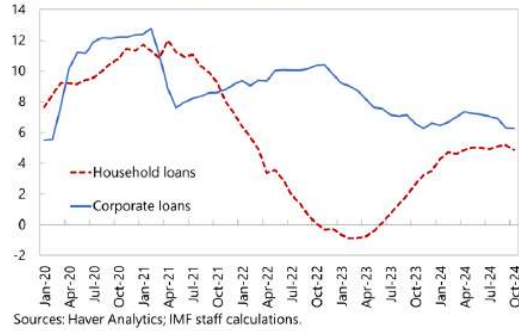
- 2024년 들어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와 활발한 기업 신용에 힘입어 민간신용 증가세가 반등하였음
 -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소 완화되었고, 신용 갭(credit gap)³⁾도 축소되었음

2) 중앙은행, 은행, 공적 금융기관 이외의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공식적으로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NBFi)을 지칭함.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투자 펀드, 연기금, 보험회사, 헤지 펀드, 금융기술(FinTech) 기업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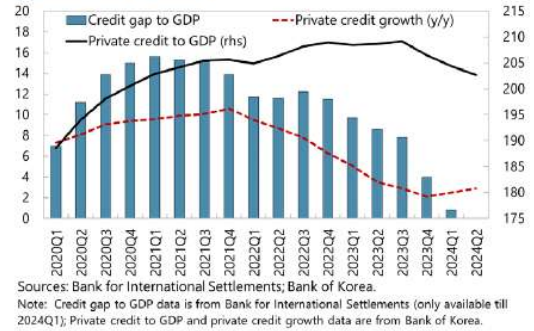
3)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 금융위기 조기 경보 지표로 활용되며, 신용 갭이 클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고 해석함.

[그림 II-9] 민간신용 증가세과 신용 갭

Household and Corporate Loan Growth
(In percent, y/y growth of outstanding household loans)



Private Credit Growth and Credit Gap
(In percent of GDP or percent)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8

〈표 II-1〉 한국의 PF 연락처를 위한 주요 조치

(2024년 5월 발표)

조치	정책 설명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a) PF 대출, 브릿지론 ⁴⁾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b)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하여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c) 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 d)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정리 및 구조조정 절차 마련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a)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 확대(PF 사업자보증 5조원 추가확대,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 신설) b)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추가보증 제공, PF 정상화 펀드 재원 활용) c) PF 수수료 구조 개선 TF는 2024년 3~4월 동안 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11월 18일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	a)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으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024년 6월 27일에 PF 대주단협약 개정(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대주단 동의요건 강화(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조정),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 원칙적으로 상환) b) 은행·보험업권의 공동 대출(syndicated loan, 최대 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자산 인수 경·공매, 그리고 MG새마을금고중앙회(MGCC) 및 저축은행에 대한 KAMCO의 추가 지원(각 2천억 원)을 통해 재구조화 또는 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 제공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	a)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비율 완화조치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회사 한시적 규제완화 b) 사업성이 없는 개발 프로젝트의 재구조화 또는 정리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총당금 적립 실태를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자본금 확충 지속 유도 c) 「94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금융시장과 건설사,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Text Table 1

4)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한 일시적인 단기 대출로, 영구적인 자금 조달을 마련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3. 전망 및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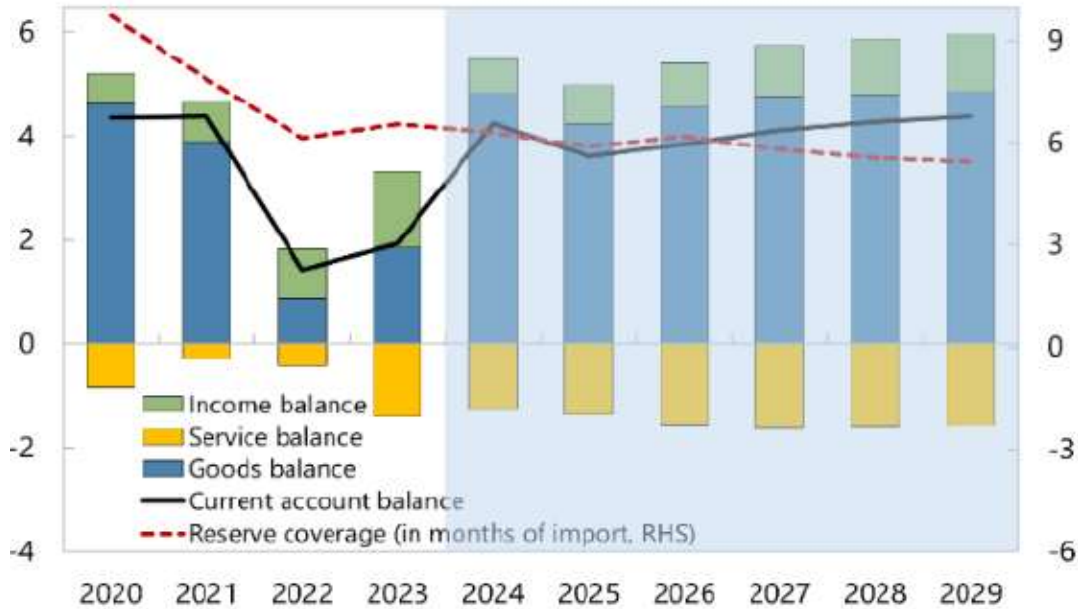
- **한국은 2025년에 경제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AI 관련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에 급등한 이후 비AI 반도체 및 전기차(EV)에 대한 수요 둔화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실질 소득이 개선되고, 통화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투자는 탄력적인 기업 신용 여건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의 부진과 주요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심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하면서 2024년에 잔존하던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해소되고, 실질 GDP가 2025년에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긴장의 심화와 주요국의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2025년 대외 부문의 상태는 2024년 추정 적정수준(원문의 Annex III 참고)과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내수 회복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기적으로는 한국의 해외 투자 증가로 본원소득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보유액은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역할을 수행함. 주로 사업자금 마련, 부동산 매입 자금 마련, 인수합병 자금 마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그림 II-10]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 수준

(단위: 좌축 GDP 대비 비율, 우축 수입월수)



Source: IMF staff calculations.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10

○ 단기적으로 재정긴축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재정충격지수는 마이너스(-)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승인된 2025년 예산안은 세수의 반등과 지출의 소폭 증가를 상정하고 있음
- IMF는 2025년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까지 축소되고, 경기 순환을 감안한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3%, 재정충격은 GDP의 -0.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해당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GDP의 0.16%에 해당하는 지출이 삭감되었음
- 중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이 대체로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부채는 상당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원문의 Annex IV 참고)
 -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45.5%에서 2029년 5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며, 하방 위험이 우세함(원문의 Annex V 참고)**

- 예상보다 빠른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AI 관련 반도체 수요의 약화, 주요국의 급변하는 정책 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리적·경제적 분절의 위험이 증가하여 국제무역 및 투자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24년 8월 초 경험한 것처럼, 갑작스런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를 비롯한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금융 여건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기후변화의 충격으로 인해 세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민간의 투자 결정과 소비 심리에 부담을 주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한편, 구조개혁의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음

(당국 입장)

○ **한국 정부 당국은 경제 전망과 위험에 대한 IMF의 평가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함**

- 당국은 수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당분간 강건할 것으로 보았고, 통화정책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또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전망 경로를 둘러싼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음
 - 이러한 정책 변화가 경제성장에 있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으며, 물가상승에도 상방과 하방 모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 당국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함
- 아울러,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요 경제 부처 수장들이 매일 회의를 통해 시장 동향과 정책 대응을 논의하고 있음
 - 이미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필요할 경우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도 취할 계획임을 밝혔음

○ 한국 정부 당국은 대외 부문에 대한 IMF의 평가에 동의함

- 당국 역시 2024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202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들을 인지하고 있고, 정책 대응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반도체 시장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
- 당국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기에 높은 변동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입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함
- 아울러, 외환보유액 규모와 높은 수준의 순 대외자산 규모가 잠재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IMF와 의견을 같이하며, 대외 부문이 중기 경제 기초여건과 바람직한 정책에서 도출한 수준과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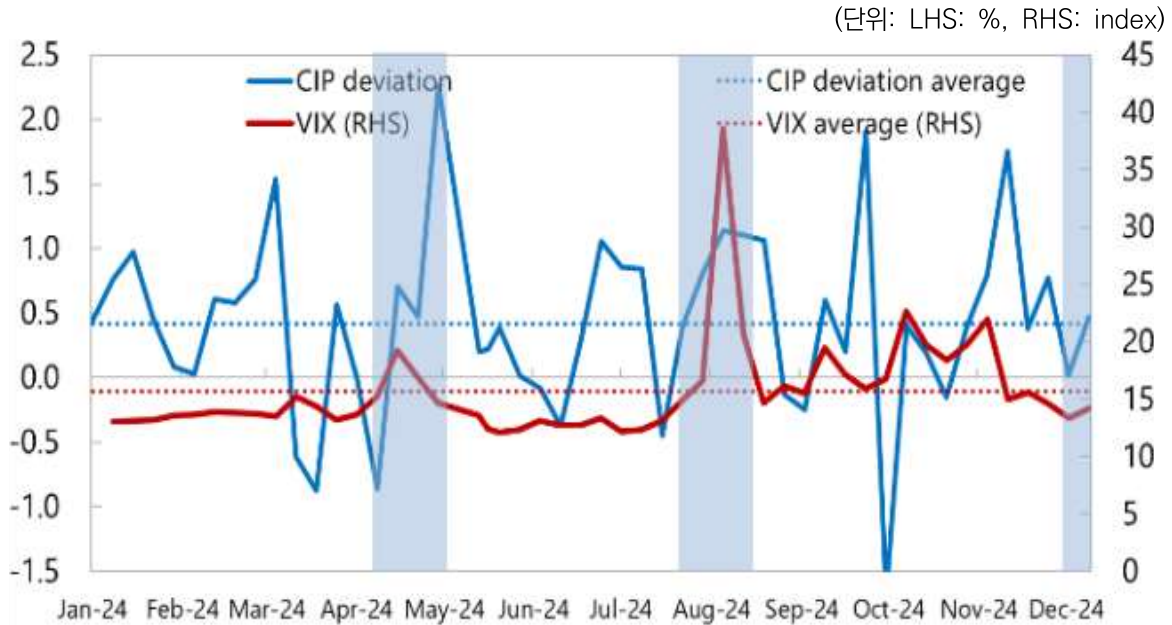
4. 정책 논의

가. 재정 완충여력을 재건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 2024년 중 통화정책은 긴축기조에서 연말 금리인하의 완화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경제전망 변화와 금융위험 간 균형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상방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4년 대부분 기간 동안 긴축적인 통화기조를 적절히 유지하였으나, 하반기에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및 내수 부진을 고려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사이클에 진입함
 -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가 확실히 자리 잡을 때까지 주택 관련 금융안정 위험을 억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 위험이 통화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되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만약 경제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보다 빠른 통화정책 완화도 고려되어야 함
 -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함
- **외환시장 개입(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FXI)은 시장의 질서 있는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함**
- 현재 전반적으로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외환시장을 감안할 때, 환율 변동성이 거시금융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군집 행동(herding behavior)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장 유동성 부족을 우려함
 - 이는 무위험 무차익 기준인 커버드 이자율 평형(covered interest parity)에서의 큰 괴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이 시장기능 개선 및 과도한 환율 변동 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최근 도입된 외환시장 개혁은 외환시장의 깊이(depth)를 확대하고 통화시장의 효율성 및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그림 II-11] 커버드 이자율 평형 편차 및 변동성 지수



주: CIP deviation = 현물 원달러 환율*(1 + 한국 단기금리)/역외선물환(NDF) 원달러 환율 - (1 + 미국 단기 금리), 한국 단기 금리= 한국 3개월 CD 금리, 미국 단기 금리= SOFR 금리(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미국 달러의 단기 지표금리), VIX =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12

○ 계획적이고 적절한 재정건전화와 지출 우선순위는 긍정적임

- 2024년 세입 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화의 일시적 중단 이후, 2025년부터 재정건전화가 재개됨
 -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가 2024년 GDP 대비 3.6%에서 2025년에는 3.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중기적으로는 재량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추가 재정건전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준칙안에 명시된 GDP 대비 3% 한도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해당 재정준칙은 현 정부의 암묵적인 재정운영 기준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압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건전화가 필요함
- 2025년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보호, 인구구조

대응, 녹색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장기성장을 위한 혁신 촉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지출 방향은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됨

○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통화 및 재정정책 완화가 필요함

- 만약 부정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여 물가가 목표치 이하로 추가 하락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진다면, 빠른 기준금리 인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일시적이고 타기팅된 시장안정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참고 II-1)
 - 단,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요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함

[참고 II-1] 하방시나리오와 정책대응 방안

○ 시나리오 1. 국내수요의 지속적 약세

- 이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예상한 2025년의 국내수요 회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
 - 또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감소는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 수요를 한층 더 약화시킬 수 있음
 - 그 결과, 국내소비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되고, 이는 소득 증가와 고용에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됨
 - 따라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아지게 됨

○ 시나리오 2. 지정학적 위험

- 이 시나리오는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 격화로 인해 2025년에 유가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효과와 2차 파급효과로 인해 전 세계 및 한국의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상승
 -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긴축적으로 전개됨
 - 구매력 감소와 긴축된 통화정책은 세계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

○ 시나리오 3. 지리적·경제적 분절 심화

- 이 시나리오는 2025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예를 들어, 새로운 관세 부과 등)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을 가정
 - 이로 인해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투자 감소, 시장 효율성 저하, 공급망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단기 및 중기적으로 글로벌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
 - 그 결과, 한국의 수출 수요가 줄어들고, 한국의 무역수지, 고용, 소득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내수요 회복도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행되며, 물가상승률에 하방압력을 초래
 - 또한, 혁신과 기술 도입 속도도 둔화될 수 있음

○ 정책대응 방안

- 시나리오 1 및 2 발생 시, 한국은 단기적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므로 취약계층 대상의 현금지원 확대, 고용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가계 구매력 강화를 위한 사회보조금의 일시적 확대 등 타기팅되고 일시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일시적이며 선택적으로 설계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
- 시나리오 1에서는 국내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기준금리를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인하해야 함
- 반면 시나리오 2가 발생하면,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중단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2차 파급효과의 범위와 한국 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시나리오 3에서는 국내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 모두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함
 - 동시에, 혁신 촉진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 유지는 중요하며,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함

○ **당국은 금융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금융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정책 노력은 바람직하며, 주요 금융취약성 대응 영역은 다음과 같음

■ ① 주택시장 대응

-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대출 규제(스트레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공급 측 규제 완화는 바람직
- DSR 규제의 확대 적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도입 등의 추가 조치도 통화정책이 추가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음

■ ② 프로젝트 파이낸싱(PF)⁵⁾ 안정화

- 2024년 5월에 발표된 종합적인 PF 연착륙 대책은 매우 고무적임
 -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개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공보증 확대 및 대주단 대출(syndicate loans)의 활용은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유동성을 지원할 것임
 -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의 구조조정 및 정리(resolution)는 PF 정상화 기금,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일시 완화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이는 금융 및 재정 위험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정리와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함

■ ③ 시장안정화 조치

- 당국은 PF 관련 시장 스트레스(2022년 10월)와 정치적 혼란(2024년 12월) 등 글로벌 및 국내 충격으로부터의 경제 및 금융 파급을 제한하기 위해 자산 매입 및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해왔음
 -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 혼란에 의해 촉발된 심각한 금융 스트레스에 대한 임시방편으로는 유용하지만 일시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금융 불안 위험 감소 시 즉시 중단 필요함

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특정한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시공사 등의 신용도에 기초하여, 장래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표 II-2〉 한국의 주요 주택시장 대책(2024년 발표)

조치	내용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1단계(Phase I): 2024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스트레스 금리 0.38%가 적용. 이에 따라,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상환 방식에 따라 2~4% 축소 -2단계(Phase II): 2024년 9월 1일부터, 은행의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0.75%의 추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단,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는 0.75%가 아닌 1.2%의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3단계(Phase III): 2025년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인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1.5%의 추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
주택 공급 확대	-서울 및 위성도시에서 21만 7천 호의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을 신속히 추진, 추가로 최소 21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마련할 계획 -2023년 기준, 서울과 인근 경기도 지역에는 약 800만 호의 주택이 존재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여 신규 사업 부지를 확보 -건설사에 대한 대출보증 한도를 상향하여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 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14

(당국 입장)

○ 한국은행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함

-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률을 모두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임
 -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이 건전성 규제 강화 이후 안정화됨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성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려 요인이라고 언급함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성 위험이 통화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IMF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통화정책도 금융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물가, 성장, 금융안정 간의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함
 - 최근 한국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실질 중립금리 범위는 -0.2~1.3%로 추정함

- 또한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IMF의 의견에 한국은행도 동의함

○ **당국은 환율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

-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균집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행되며, 특정 환율수준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최근 외환시장 개혁은 시장변동성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증가했으며, 이는 외환시장의 심화(deepening)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함
-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이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유입 증가 위험을 감당할 만큼 외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

○ **당국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2025년 예산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년부터 재정건전화 기조를 재개할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나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발생할 경우, 현재 2025년 예산 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회에서 승인된 2025년 예산의 충실하고 효과적인 집행이라고 강조함
- 또한, 세계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증가 억제가 핵심이라고 인정함

○ **당국은 IMF와 금융위험 평가에 공감하며, 주요 취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당국은 최근 조치들이 주택시장 불안정 위험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언급했지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IMF 권고에 따라 주택가격이 재차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DSR 규제 확대 적용 등의 추가 조치도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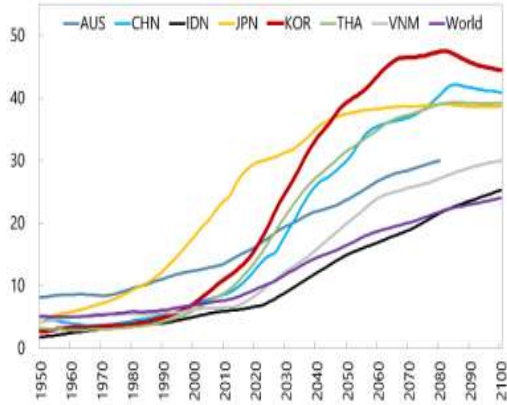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락처 지원 조치가 이루어졌음
 -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분류 기준
 -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 매각의 성공적 개시
- 당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주도적(market-driven)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재정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당국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일시적이고 타기팅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또한, 당국은 한시적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나. 구조적 전환 속에서도 경제성장 지속

- 구조개혁 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자본의 오배분 가능성, 생산성 둔화 등과 같은 장기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저출산의 경제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외국 인재 유치를 강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노동력 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가계부채 감소, 자본시장 개혁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개선하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나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고, AI 혁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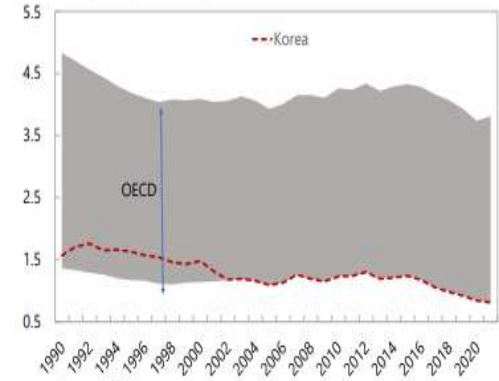
[그림 II-12] 한국의 구조적 과제

Share of Populations 65 or Older
(In percent)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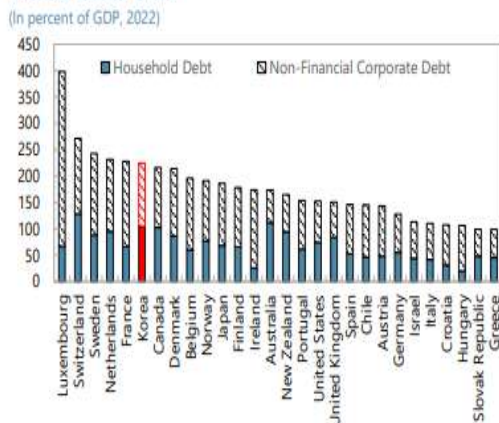
Fertility Rate - Korea and OECD Peers
(In number of births per woman)



Source: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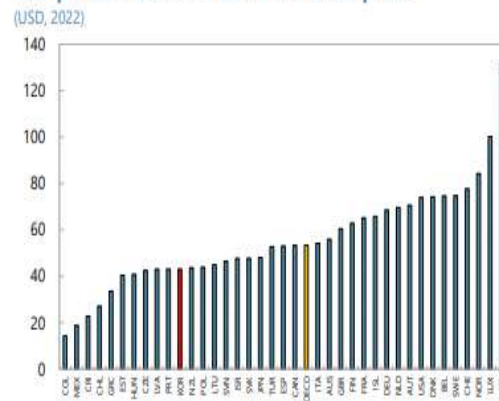
Note: The shaded area reflects the range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Private Sector Debt
(In percent of GDP, 2022)



Source: IMF Global Debt Database.

GDP per hour worked - Korea and OECD peers
(USD, 2022)



Note: GDP is measured at 2015 constant prices PPPs.

Source: OECD.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16

1) 노동인구 감소 대응

○ 노동인구의 감소는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있어 다양한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2023년 세계 최저 출산율(0.72)을 기록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66%, 2070년에는 4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노동공급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잠재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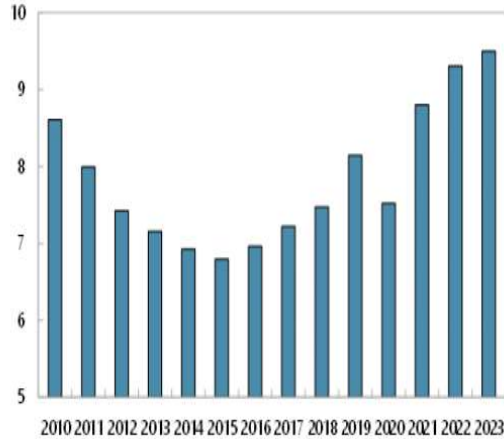
-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비가 상승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 또한 인구 고령화는 저축과 투자 간의 역학(dynamics) 구조에 변화를 야기하여, 중립금리,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작동 방식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 구조개혁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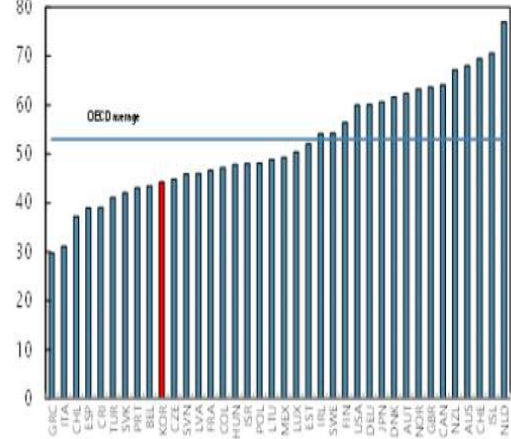
- 출산율 하락은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지연시키며 젊은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수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는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
- 자녀 양육비용 감소
 - 한국은 소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교육비와 특히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이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제와 경력 단절 비용도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임
 - 교육비와 주거비, 여성의 경력 단절 비용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녀 양육비용을 줄이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함
- 청년 소득 증대
 -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는 청년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기 때문
 -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전문직 취업을 위해 경력을 유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학력자의 NEET(취업, 교육,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 비율이 높음
 -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 원인임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청년의 소득을 개선하는 것이 가정 형성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핵심
 -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교육 관련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임

[그림 II-13] 교육 비용과 청년 고용

Monthly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 percent of average monthly household disposable income)



Korea - youth employment is below OECD average
(percen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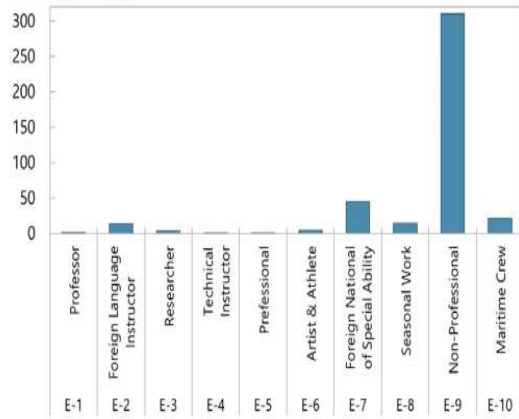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17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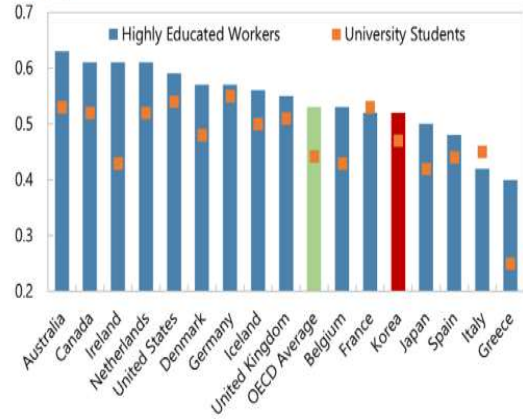
- 출산율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므로, 단기·중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 완화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은 여성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음
 - 사회적 관습과 육아 부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있음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을 장려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원격근무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노동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그림 II-15] 외국인 노동자

Number of Foreign Workers by E Visa Type in 2023
(In thousands of person)



Talent Attractiveness Index in 2023 for OECD Countries
(In scor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19

(당국 입장)

○ 노동력 감소 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IMF의 권고사항은 한국의 재정 당국이 제시한 우선순위와 대체로 일치함

- 저출산을 국가적 인구 위기로 선언한 당국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출산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인구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신설 부처 설립 계획을 발표함
 - 최근 실시된 가족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 부담, 주거비용 부담이 출산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당국은 정책의 초점을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과 가족 관련 예산지출 확대 쪽으로 전환했으며, 기존 출산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에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으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실무 역량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숙련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으며, 여기에는 비자 요건 완화, 유학생 정착 지원, 전반적인 이민 정책 재검토 등이 포함됨
- 당국은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한국의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유연성 제고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임

2) 자본 배분 개선

○ 금융기관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비은행금융기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 위험 노출은 자산 건전성 악화, 수익성 악화, 대손충당금 감소를 고려할 때 여전히 우려되는 사항임

- 다음과 같은 자산건전성 개선 조치는 긍정적임

- 부실채권의 경매 및 공매 방식 매각 촉진
-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한 부실채권의 중앙집중식 관리 강화
- 저축은행의 다중 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확대
-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비중에 상한제 도입

- 예금취급 비은행금융기관(depository NBFIs)의 유동성 대응 능력, 자본 적정성, 대손충당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의 대출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2020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의 권고사항과도 일치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도 필요함

- 금융 당국이 최근 발의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금융 당국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적절함

- (은행) 은행 부문은 전반적으로 건전하지만, 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비율은 일부 해외 은행들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자산건전성 개선 조치는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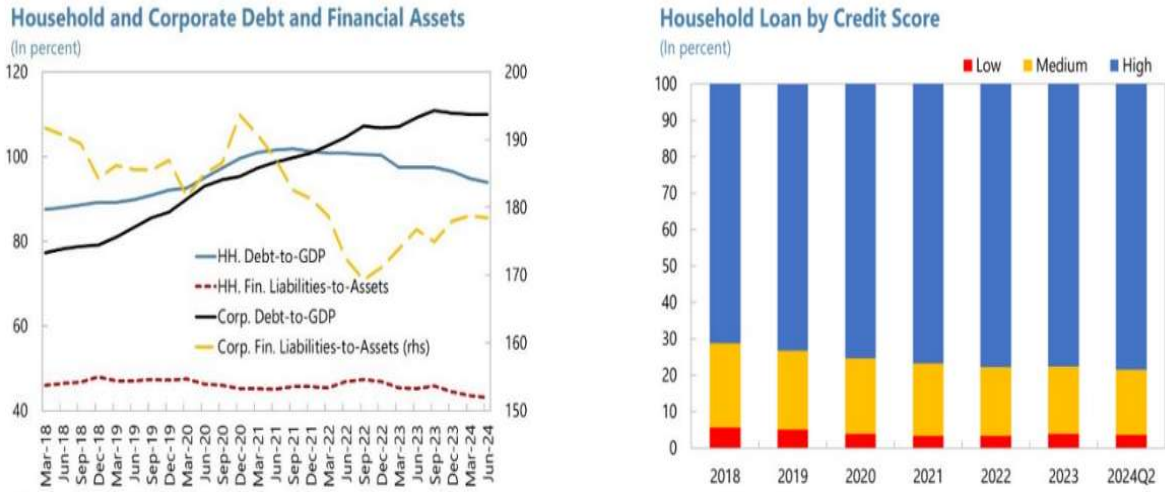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Coverage ratio), 예대율(Loan-Deposit ratio) 정상화와 같은 자산건전성 규제 정상화

-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비율을 0%에서 1%로 상향
- 위기 상황 대비 자본 완충제 도입 계획
-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것은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을 통한 사회적 지원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 최근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바람직함

-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우량 금융자산의 비중이 크고, 취약한 차입자의 비율이 낮아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 부담과 이자 지급 증가는 한국의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제약하고 있음
 - 따라서,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바람직하며, 이는 생산적인 분야로의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해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가 적절한 조치임
-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 전망을 고려하는 한편, 주택공급 측 규제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동된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임
- 전세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및 위험 모니터링 강화는 전세 계약의 갱신 위험 완화, 주택 가격 충격의 확산 방지, 가계 레버리지 축소에 기여할 것임
- 기업부채와 관련하여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조달(financing)을 유도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책방향은 타당함
 -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와 부실한 개발업체의 부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최근 조치도 긍정적이며,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 및 파산제도 개선도 병행되면 효과적임(2020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권고와 부합)

[그림 II-16] 민간 부문 대차대조표와 취약 차입자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21

○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외환시장 심화를 위한 개혁 조치는 바람직함

- 새로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Corporate Value-Up Program)'은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온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목표로 하며, 기업가치 격차(valuation gap)를 줄임으로써 한국 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함
 - 기업들이 자체 밸류업 계획(Value-Up Plan)을 공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임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세제 혜택 및 투자 인센티브의 활용은 시장 기반의 가격 형성(market-driven price discovery)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등록된 외국 기관의 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록 등의 조치를 포함한 외환시장 개혁은 외환시장의 심화를 통해 시장 회복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개혁 조치 이후, 2024년 10월 한국은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에 편입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투자자로부터의 자본 유입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당국 입장)

○ 당국은 자본배분 개선을 위한 IMF의 권고사항에 대체로 동의함

- 당국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자본비율(capital ratio) 제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강화 조치도 시행 중임

- 저축은행에 Basel II 기준에 따른 새로운 자본요건비율 적용과 카드사에 위험 기반 자본 규제(risk-based capital regulation) 도입을 고려 중임
- 예금취급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과의 대출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은행 부문에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중립적 수준에 대해 검토 중이며, 위험상황 대비 완충자본(stressed capital buffer)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 진행 중임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계획 중임

-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 이하로 제한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

■ 기업부채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본을 재배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외환시장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IMF의 평가에 동의함

- 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외환시장 개혁이 자본시장의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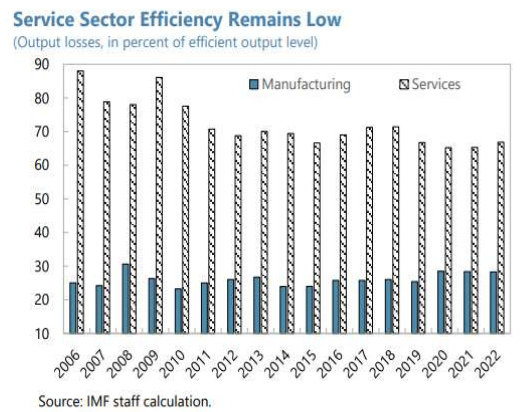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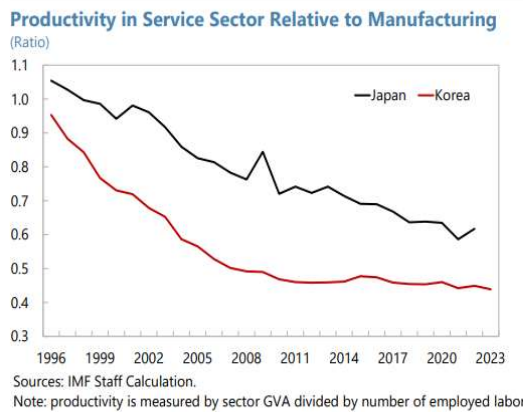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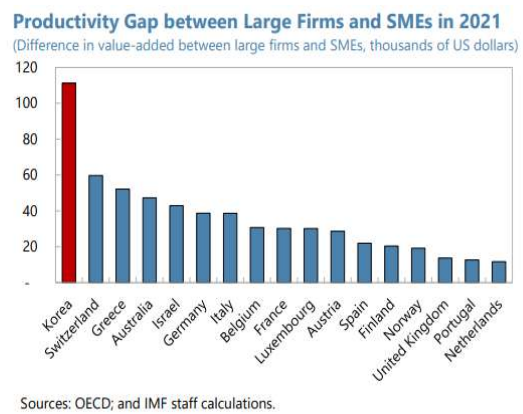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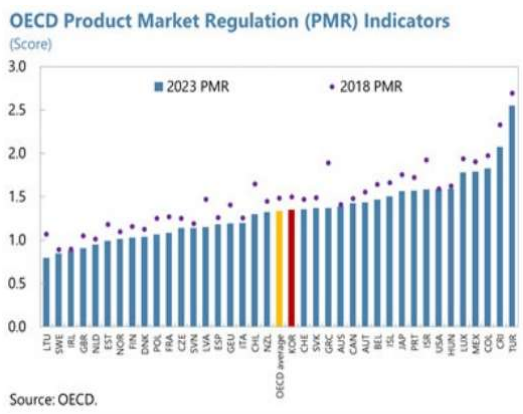
3) 생산성 향상

○ 보다 유연한 상품시장과 낮은 규제 부담은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SME)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로 이들 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에서 기인함
- 전반적인 상품시장 규제의 엄격함이 개선되어 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정부의 기업 운영 개입, 서비스 부문의 시장 진입 장벽 등 규제를 줄일 여지가 여전히 존재함

- 법적 진입 장벽과 창업비용을 낮추고, 복잡한 인허가 요건을 간소화하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장기적인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며, 국제무역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음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기업 규모나 생존 여부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생산성 향상 능력과 장기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함

[그림 II-17] 상품시장 규제와 생산성 격차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22

○ AI의 도입은 생산성과 산출량을 크게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AI 도입에 있어 세계 선도국가 중 하나이며,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AI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AI 도입률은 기술력이 뛰어난 대규모 신생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AI가 직무를 보완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30년 동안 생산성과 산출량을 각각 약 3% 및 13% 증가시킬 수 있음
 - 이는 고령화에 따른 산출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음
-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강국으로, 세계 AI 호황의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
 - AI 수요 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AI 도입의 생산성 및 산출량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지 않음
 -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AI 도입의 효과는 주로 규모가 크고 성숙한 대기업들에 집중됨
 -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음
- 따라서, AI의 잠재적 이점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AI 혁신 및 통합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적절한 규제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당국 입장)

- **당국은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SME)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 그리고 AI 도입 지원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당국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옴
 - 또한 혁신과 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구조조정하여 간소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 AI 도입을 통한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석과 더 나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함
 - 또한, 혁신 촉진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최근 도입된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축 중 하나임을 강조함

4) 성장잠재력 실현: 개혁 시나리오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AI 도입 확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개혁의 성과는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음**
 - IMF 추정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LFPR) 및 노동소득 비중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고령화가 평균 연간 잠재성장률을 2023~2050년 동안 약 0.67%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AI 도입 확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선의 개혁 효과는 이러한 잠재성장률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음
 - 특히 향후 10년 동안 개혁을 선제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경우, 성장 효과의 조기 실현, 대중의 지지 확보, 재정 완충여력 확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완충장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따라서 이미 계획되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출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개혁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장기 도전과제에 대한 회복력 구축

- **정책은 지리적·경제적 분절의 심화, AI를 포함한 급속한 기술 변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도전과제로 특징지어지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된 엔진인 한국은 지리적·경제적 분절의 심화와 전 세계적인 산업정책(Industrial Policies, IPs)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무역 교란에 취약한 구조임
 - AI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규모 노동력 대체라는 위협도 수반하고 있음
 - 특히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이 같은 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는 극심한 기상 이변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가 설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

- 따라서 강력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임

○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은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임

- 특히 지리적·경제적 분절, 즉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시행하는 무역 전쟁 및 기술 제한 조치는 한국의 수출과 해외 생산 거점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함
-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은 한국 수출에 대한 세계 수요를 줄이고, 핵심 수출 산업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킴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특정 시장의 일부 부문에는 단기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리적·경제적 분절 및 산업정책 활용 증가로 인한 하방위험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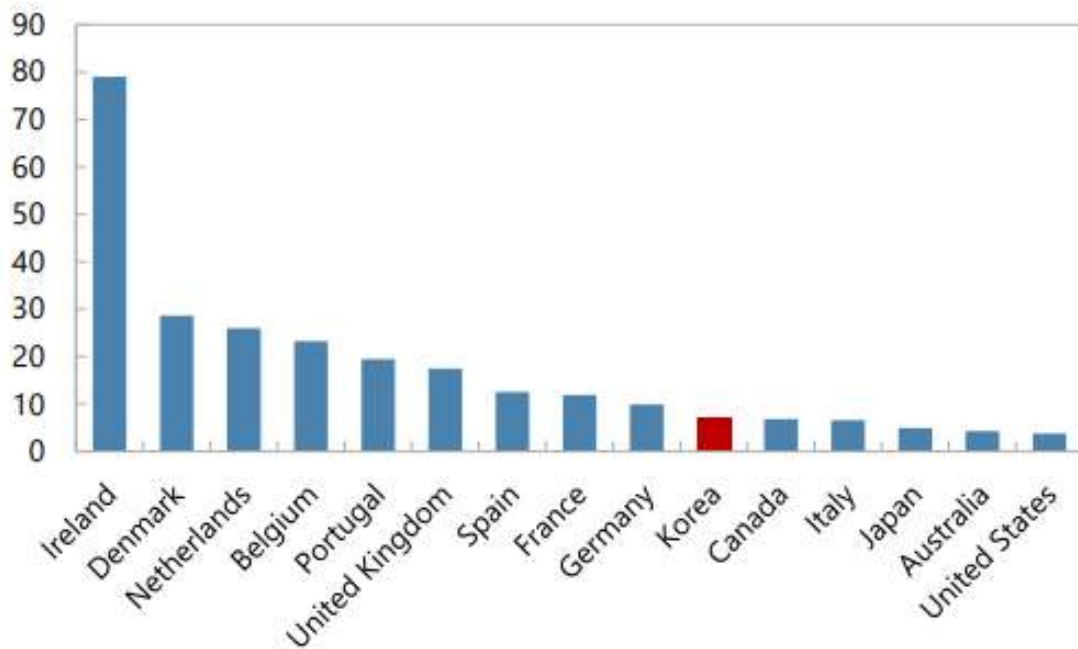
○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혁신 촉진을 통한 수출 경쟁력 유지
 - 한국의 핵심 수출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외에도, 한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
 - 정책 지원은 혁신에 집중되어야 하며, R&D 세액공제 및 혁신적인 청년기업 대상 연구보조금은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임
 - 한국은 공공 연구 투자 규모가 세계 선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공공 연구 확대는 민간 R&D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를 유도하여 기초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조합에 대한 지출을 GDP 대비 0.5%p 늘리면 최대 2%의 GDP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수출 품목, 교역 대상국, 공급망의 다변화
 - 제조업과 달리,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문화 콘텐츠, 제조업 연계 서비스, 정보통신과 같이 외부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육성하면, 서비스 부문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 관계 확대를 통해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은 회복력 있는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 기존 무역협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망 다변화 여지를 확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잠재적인 무역·물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음

[그림 II-18] 2023년 일부 OECD국가의 서비스 수출

(단위: GDP대비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24

■ 산업정책(IP)의 활용 재검토

-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전략산업(반도체, 자동차 등)의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K-칩스법(2023년 제정) 및 그 이후의 확대·연장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조치를 도입했음
- 산업정책은 외부효과나 시장실패 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역 및 투자 왜곡을 최소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국내외 생산자간 차별이 없어야 함
-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입보다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수평적(산업 부문 중립)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유리

- 당국은 공공 R&D 지원을 포함하여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 당국은 일부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통해 산업정책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데 성공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AI 도입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기팅된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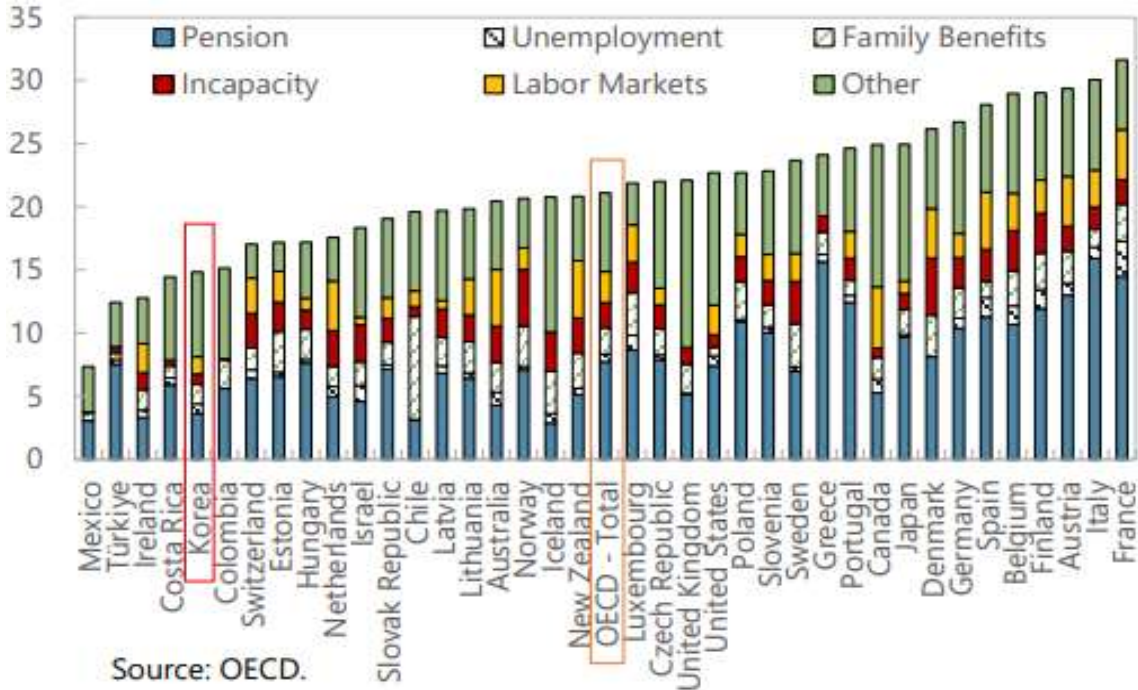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한국은 선도적인 혁신 역량과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AI 준비도 면에서 우수한 위치에 있지만 규제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음
- AI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노동시장에 문제도 유발할 수 있음
 -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 정도가 AI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음
 - 일부 직업은 AI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직업은 대체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여성, 청년, 고숙련·고소득층은 AI의 부정적 영향에 더 취약한 동시에, AI 도입에 따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평가됨
 -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는 특히 고령층에게 직업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도전과제임

○ AI 전환에 대비한 정책 제언으로 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타기팅된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함

- 타기팅된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에는 산업 부문별 직업교육, 인턴십 훈련제도 등이 포함됨
-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까지 실업급여 확대 적용,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급여 수준 향상 등이 포함됨

[그림 II-19] OECD의 사회복지 지출

(단위: GDP대비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25

○ 장기적 과제 대응을 위한 포괄적 재정 개혁이 필요함

- 한국은 현재 상당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여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이는 고령화 관련 과제를 재정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제약을 가하게 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의 공공 사회지출은 지난 10년간 GDP 대비 6% 이상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율(1% 미만)을 크게 상회함
 - 그러나 노인, 장애, 보건, 가족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향후 지출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지출 비중을 증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는 재정 여력의 확보를 전제로 함
-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함

- 연금 개혁 가속화
-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
- 세입 확충 및 지출의 우선순위화

■ 세수의 예측 정확도 제고 노력은 재정의 신뢰성과 예산 계획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됨

○ 포괄적 재정 개혁에는 연금 개혁 가속화,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의 우선순위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금 개혁: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음

- 이는 공공 부채 상승 압력과 재정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최근 발표된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료율을 9% → 13%로 인상
- 소득대체율을 40% → 42%로 인상
- 인구구조 및 기금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 지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 도입
- 연금의 투자 전략을 조정하여 수익률 제고
-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 출산 및 병역 관련 연금 크레딧 확대

- 이 개혁안은 연금 개혁의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되며, 자산 고갈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급여 적정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정년 연장 역시 중요한 과제임

- 소득대체율 인상 및 자동 조정 메커니즘의 효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금급여의 형평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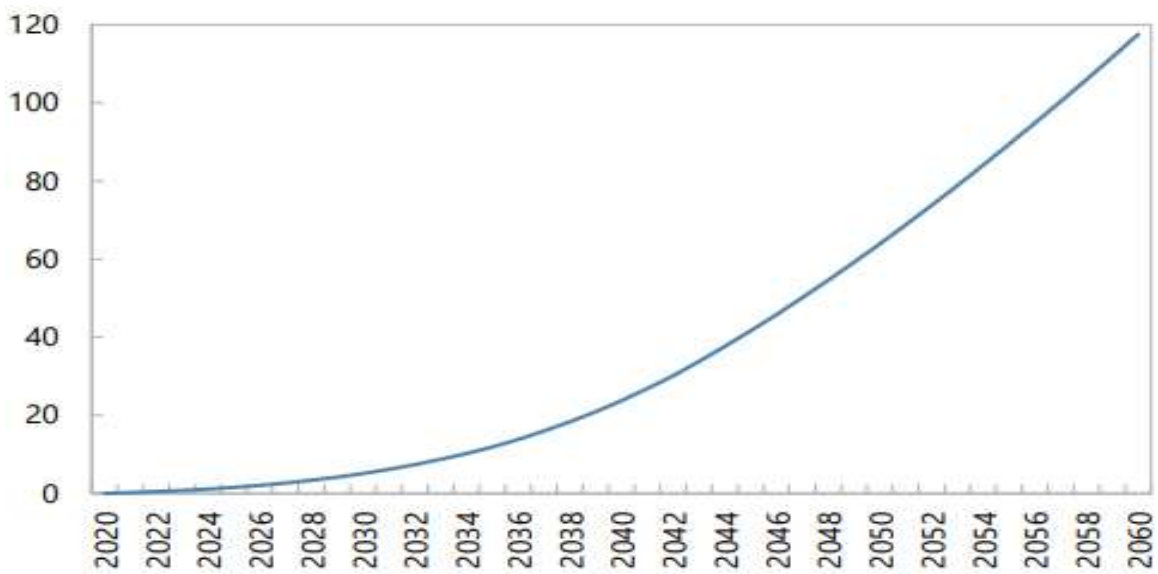
- 새로운 투자 전략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시장 및 유동성 위험, 행정 비용도 면밀히 관리되어야 함

- ② 재정준칙: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에 재제출된 재정준칙안의 신속한 이행은 예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함
 - 재정준칙의 정량적 목표는 대체로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당국이 제시한 재정적자가 적자 상한선에 근접해 있어 재정준칙안 시행 시 경기대응의 재정여력 유지와 재정준칙 이행 여부에 대한 독립적 감독 기능이 고려되어야 함
- ③ 세입 확충(revenue mobilization): 지난 10년간(2013~2022년)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은 GDP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소득세 증가에 기인함
 - 그러나 전체 세입 규모는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부가가치세(VAT) 수입 부족이 주된 요인임
 -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효율성과 GDP 대비 부가가치세(VAT) 과세 기반은 다른 국가와 비슷하지만,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10%로 선진국 평균 18.5%보다 낮음
 - 다른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VAT) 감면 규모는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증가 추세
 - 한국은 부가가치세(VAT)의 세율 인상 및 감면 합리화 검토 필요
 -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증가 추세도 재검토 및 정비 필요
- ④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spending prioritization): 공공지출은 2023년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물가상승이 완화됨에 따라 식품 및 에너지 보조금은 재검토가 필요함
 - 생산량이 잠재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당국은 지방정부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임
 -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사업 재평가
 - 비효율적인 사업 축소
 - 기업 확장 유인 강화
 - 유사 보조금 사업 통합

- 부처 간 협업 확대
- 또한 국내 에너지를 국제 원자재 가격에 맞추어 조정하고 유류세 감면을 종료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

[그림 II-20] 인구 고령화가 공공부채에 미치는 영향

(단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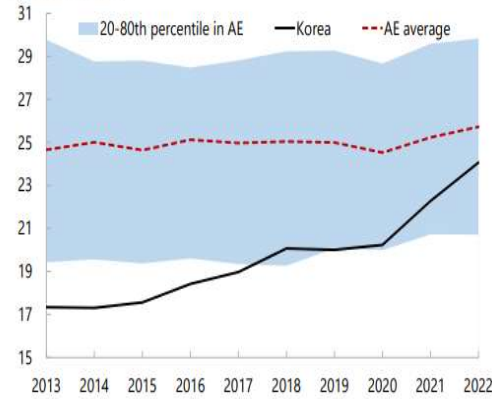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26

[그림 II-21] 정부의 조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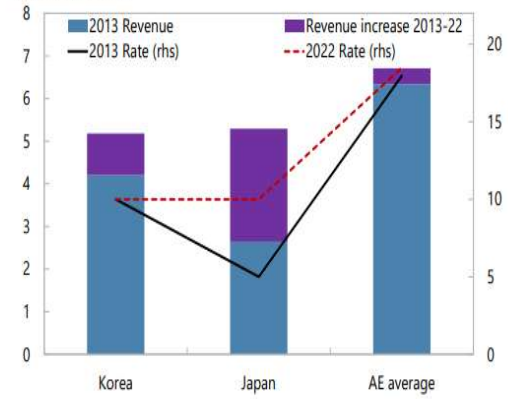
(단위: GDP대비 %)

General Government Tax Revenue
(In percent of GDP)



Source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IMF Staff calculations.
Note: AE stands for advanced economies

VAT Revenue and Standard VAT Rate, 2022
(in percent of GDP)



Source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International Tax Rates Database, and IMF staff calculations.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p. 27

○ 한국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함

- 한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동시에,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2023년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 계획에는 부문별 고차원의 정책 방향과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 및 경로가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2018년 대비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한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임
 - 따라서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배출 한도, 가격 하한선, 경매방식 할당 비중을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의 감축 목표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다른 정책 옵션으로는 배출 집약적 부문에서 피베이트(feebate)⁶⁾를 부과하는 탄소 가격 책정을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석탄세를 인상 및 확대하는 것이 있음

6) 'fee'와 'rebate'의 합성어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임. 쉽게 말해, 탄소배출이 많은 대상에는 벌금을 부과(fee)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대상에는 보조금(rebate)을 지급하는 상대적 인센티브 체계

○ 새롭게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은 이러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함

-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 점은 바람직함
- 앞으로는 각 정책 조치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당국 입장)

○ 당국은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응하는 데 경쟁력 유지와 서비스 수출 촉진이 중요하다는 IMF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당국은 제조업과 관련된 첨단 서비스 분야를 향후 성장에 있어 가장 유망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망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에도 공감함
- 또한, 연구개발(R&D)을 통한 혁신 촉진이 한국 수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함
- 당국은 향후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나 방향 전환이 세계 무역환경에 추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하여, 당국은 전 세계적인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정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가 외국 생산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WTO 규범을 포함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밝힘

○ 당국은 AI의 영향에 대한 IMF의 분석에 공감하였으며, AI 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IMF의 분석 작업에 대해 높이 평가함

- 또한 AI 및 기타 중요한 구조적 이슈에 대해 IMF와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강한 관심을 표명함

○ 당국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개혁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 동의함

-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 개혁의 시의적절한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세입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득불평등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부가가치세(VAT) 인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대신, 비효율적인 세제 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 확대를 모색함
 - 지출 우선순위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금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된 프로그램을 폐지·통합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또한 당국은 여러 차례의 가격 인상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더욱 일치시키는 데 동의하고 있음
 - 세입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음
- 당국은 한국의 기후정책에 대한 IMF의 평가에 대체로 동의함
 - 녹색산업 개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제4차 한국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2026~2030년)의 총 배출 한도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추고, 무상할당 비율을 축소할 계획임
 - 당국의 구조개혁 계획은 최근 도입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따를 예정
 - 당국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성장을 촉진하고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주요 교역국의 잠재적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현재 마련 중임

5. 협의단 평가

- 튼튼한 경제 기초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은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여러 충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경제성장률이 회복하였고, 초기에 급등했던 물가는 꾸준히 하락해왔으며, 금융안정성

위험도 감소하였음

- 물가 상승과 금융안정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은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음
- 2024년 대외 부문의 상태는 중기 경제 기초여건과 바람직한 정책에서 도출된 수준과 전반적으로 부합함

○ 2025년에는 한국의 GDP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고 경제가 전반적인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하방 위험이 우세함

-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수출 증가세가 정상화됨에 따라 2025년 GDP 성장률은 장기 추세 수준으로 완만히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 부문은 2025년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와 최근 국내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증가, 세계 반도체 수요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통화정책은 기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물가상승률 둔화와 국내 수요의 일부 약세를 고려하여 통화정책 정상화는 2024년 말 적절한 시점에 시작되었음
- 물가상승에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모두 존재하고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향후 금리 조정의 시기와 속도는 변화하는 경제전망을 비롯해 물가상승 위험 및 경제 상황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2025년 예산안에 담긴 재정건전화는 긍정적임

-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는 재정 여력을 회복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중기 재정건전화가 필요함

-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음
- **금융 부문의 위험은 감소했으나, 일부 취약 요인이 남아있음**
 - 신속하고 타기팅된 정책 대응이 금융 위험을 완화하였음
 - 그러나 당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금융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 및 규제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
- **중장기적인 개혁은 구조적 도전 과제 속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함**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 자본 배분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여전히 중요함
 - 이러한 개혁은 지리적·경제적 분절화의 심화, 급격한 기술 변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함**
 -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교육, 주거,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청년층을 위한 소득을 높이는 등 경제적 제약을 경감하는 것이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중단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를 강화하는 것이 인구구조에 따른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자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 금융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조치들은 매우 긍정적이나, 예금취급 비은행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depository NBFIs' loss absorption capacities)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건전성 정책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축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의 외환시장 및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심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 **혁신기술을 활용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AI 혁신과 활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절한 규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AI의 잠재적 이점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타기팅된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과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AI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유익할 것임
- 상품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한국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우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하며,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품목 및 교역국을 다각화한다면 자원 낭비를 피하면서도 전략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정지출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정 개혁이 필수적임**

- 주요 정책 과제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자원 조달 확대 및 장기 지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이 있음

○ **한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함**

- 제4기(2026~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 한도, 최저 가격, 경매 배출권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남았음
- 그 외 정책 수단으로는 탄소 집약적 산업 부문에 피베이트를 도입해 탄소 가격 책정을 강화하거나, 석탄세를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 있음

- 다음 연례협의를 통상적인 12개월 주기로 실시할 것을 권장함

Ⅲ 한국 담당 이사 입장문

1. 최근 동향 및 전망

- 한국 경제는 강력한 경제 기초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에 힘입어 회복력을 유지해왔음
 - 2024년에는 고용 증가세가 견고하게 이어지며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특히 반도체 분야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유지되었음
 - 또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실질소득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도 점차 회복되었음
 -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수출 호조와 견고한 본원소득수지 덕분에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전반적으로 2024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됨
- 도전적인 경제 환경에서 향후 경제성장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소비 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켰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산업에서의 세계 경쟁 심화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은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 성장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국제무역 및 공급망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탄탄한 회복력을 감안할 때, 최근 정치적 사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신속한 정책 대응과 가계 및 기업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대응 덕분에 추가적인 시장 불안이나 경제적 혼란이 잘 억제되었음
 - 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오고 있음

- 아울러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였고, 여야 및 정부는 초당적 협력으로 핵심적인 재정 및 경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국정운영협의회”라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물가상승률은 2%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된 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음
 - 1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로, 11월에 비해 올랐고, 근원 물가상승률은 소폭 하락해 1.8%를 기록하였음
- 올해 역시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변동성이 큰 국제 유가와 높은 환율 수준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은 면밀히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임

○ 한국 정부 당국은 외환보유액과 상당한 순 대외자산이 잠재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완충여력을 제공한다는 IMF의 견해에 동의함

- 외환보유액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4,154억달러에서 소폭 증가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4,156억달러를 기록함
- 당국은 외부 부문이 중기 경제 기초여건과 바람직한 정책에서 도출되는 수준과 대체로 부합한다는 IMF의 평가에도 공감함
-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가 변화하는 국제무역 양상과 주요 교역국의 대응에 영향을 받을 것임
- 한국 정부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이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함

2. 통화 및 재정 정책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뚜렷해지면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

- 2024년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환율과 물가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2025년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함
 - 한편,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증개대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함
 -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과 물가, 성장, 환율, 금융 안정 등 주요 정책 변수 간의 득실을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정책 조정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임
- **한국 정부 당국은 장기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유지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정수지 개선과 부채 관리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현 정부의 재정운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범위 안에서 편성되었으며, 총지출 증가율은 2.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8%,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8.1%로 설정되었음
 - 당국은 향후 관리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GDP의 3% 이내로 적자 수준을 유지하고, 2028년까지 정부 부채를 GDP의 약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 아울러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국민연금 개혁도 적기에 추진할 방침이며, 정부가 제안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
- **2025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경제활동 지원, 혁신 촉진, 국민 생계 보호 등 시급한 재정지출 사안도 반영하고 있음**
- 필수적인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전체 지출 규모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되었음
 - 당국은 또한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량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조세 지출 합리화, 보조금 통합 및 폐지, 세입 예측 정확도 제고 등 지속적인 재정 개혁을 통해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음

3. 금융 부문 정책

- **높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성에 대한 체계적 위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규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험은 연착륙 조치와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완화되고 있음
 - 지난 해 12월 이후 급등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일시적인 규제 완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진정되었음
 - 당국은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자본 여력, 가계 및 기업부채, PF 부실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
 - 필요시 비상계획에 따라 일시적이고 타기팅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

- **당국은 금융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음**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보 공시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수준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식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의 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거래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개혁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은 외환시장을 더욱 심화시켜 시장의 복원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지난 해 10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당국은 역외 투자를 위한 거래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4. 구조개혁 정책

○ 한국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지난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확대, 사회 이동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혁신 촉진과 산업 경쟁력 제고는 여전히 중요한 핵심 정책 과제임

- 당국은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반(反)경쟁적 규제 타파, 숙련 인재 양성, AI·양자 컴퓨팅·바이오 기술 등 필수 인프라 및 혁신적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창업 활성화, 첨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출 성장도 견인하고자 함
-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WTO 협약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기준에 철저히 부합함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 금융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필수 생계비를 낮추고, 방과 후 돌봄과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며,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나아가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 촉진,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유지 지원 프로그램, 경력 전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진행 중임

-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가족 관련 예산 지출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전망치와 전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임
- 또한 숙련된 외국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는 국가의 기후 목표 달성과 녹색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2026~2030년)의 총 배출 한도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설정할 계획임
 - 또한 무상 할당 비중 축소와 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IV

주요 쟁점- 미래 전환: AI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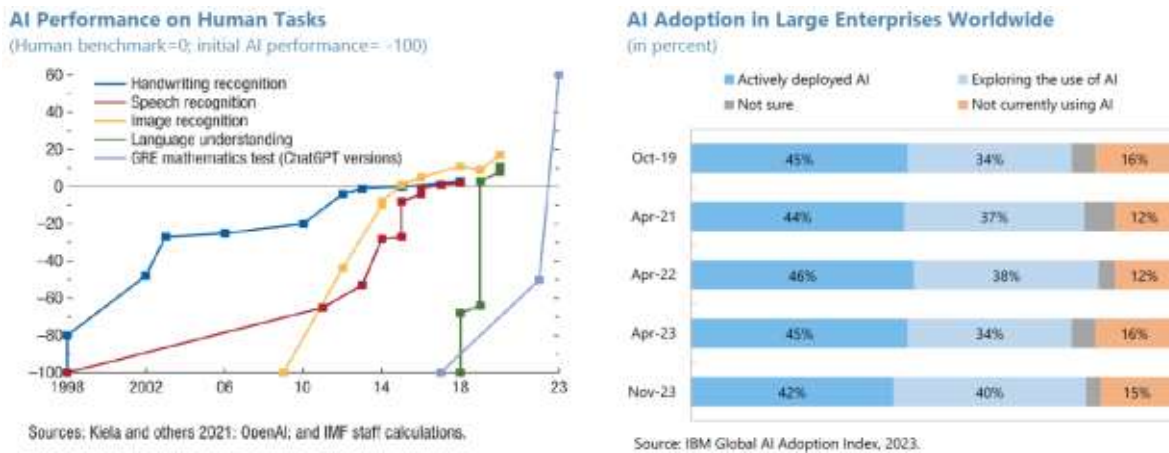
1. 서론

○ AI는 전 세계적으로 변혁을 이끄는 힘으로 부상함(그림 IV-1)

- AI는 기계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기술들을 의미함(Cazzaniga et al., 2024)
- 최근 AI의 발전,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및 생성형 사전학습 변환기(GPT)와 같은 시스템을 포함하는 생성형 AI(GenAI)의 등장은 여러 인지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이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었음을 보임(IMF WEO, April 2024)
- IBM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직원 수 1,000명 이상) 중 상당수가 AI를 도입하였으며, 조사에 응한 IT 전문가의 42%가 AI를 배치하였고, 추가로 40%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적극적인 탐색을 진행 중임

[그림 IV-1] 세계의 AI 혁신과 도입

(단위: 지수, %)



주: 왼쪽 그림은 IMF WEO, 2024년 4월 제1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필기 인식부터 언어 이해까지 다섯 가지 영역에서 인간과 AI의 성능을 평가한 여러 테스트에서 기반. 오른쪽 그림은 IBM Global AI Adoption Index, 2023의 수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

○ 한국과 같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경제에서 AI의 도입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AI는 고령화 경제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함

-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는 잠재 노동력 부족, 생산성 둔화, 그리고 보건 및 연금 시스템에 대한 압력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함
- AI는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노인 돌봄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편 AI는 일자리 대체, 노동자 소득 감소, 불평등 심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기술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 고령층이 큰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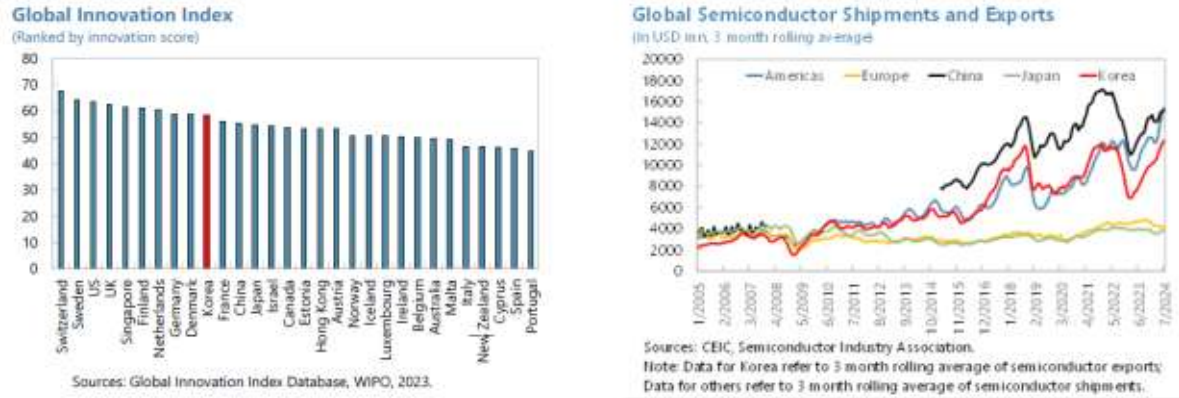
- 과거 범용 기술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AI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함

○ 한국은 선도적인 혁신국이자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AI에 매우 크게 노출되어 있음

- 한국은 선도적인 기술 혁신 국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세계 혁신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IV-2)
 -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과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소재지임
- AI 기술은 고도의 처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 장치(GPU) 및 특화된 AI 프로세서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칩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유발함
-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AI 시스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 칩의 개발 및 생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음
- 2024년 상반기에는 세계 AI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함(그림 IV-2)
-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AI 호황으로 큰 기회를 얻었지만, 치열한 세계 경쟁, 기술적 복잡성,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분쟁,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필요성과 같은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음

[그림 IV-2] 최고 수준의 혁신국 및 반도체 생산국으로서의 한국

(단위: 지수, 100만달러)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2.

○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문헌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저조함

-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자리 대체 효과(job displacement; Felten et al., 2021 and 2023)와 보완적 역할(complementary roles; Pizzinelli et al., 2023)이 포함됨
 - 일부 연구는 AI 도입으로 인한 총생산성과 산출 증가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 범위는 넓음(Acemoglu, 2024; Briggs and Kodnani, 2023; McKinsey, 2023)
 - 소수의 연구는 AI 활용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함(OECD, 2023)
 - 최근 IMF 연구(Cazzaniga et al., 2024)는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AI의 다면적인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음
- 한국에서도 관련 문헌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AI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Han and Oh(2024) 및 KDI(2023), AI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연구한 KDI(2024)가 있음
 - 그러나 노동시장, 기업 생산성, 산업 발전, 사회의 AI 전환 준비 수준 등 한국의 AI 도입이 갖는 광범위한 경제적·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본 장에서는 최근 문헌을 바탕으로 AI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을 분석함

- 제2절은 한국 기업과 노동자 측면에서 AI 도입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제시함
- 제3절은 한국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완 효과와 대체 효과를 포함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제4절은 모형 기반 추정과 기업 수준의 실증 분석을 통해 AI가 생산성과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제5절은 한국 사회의 AI 전환 준비도를 분석하고, 세계 선도국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식별함
- 제6절은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한국에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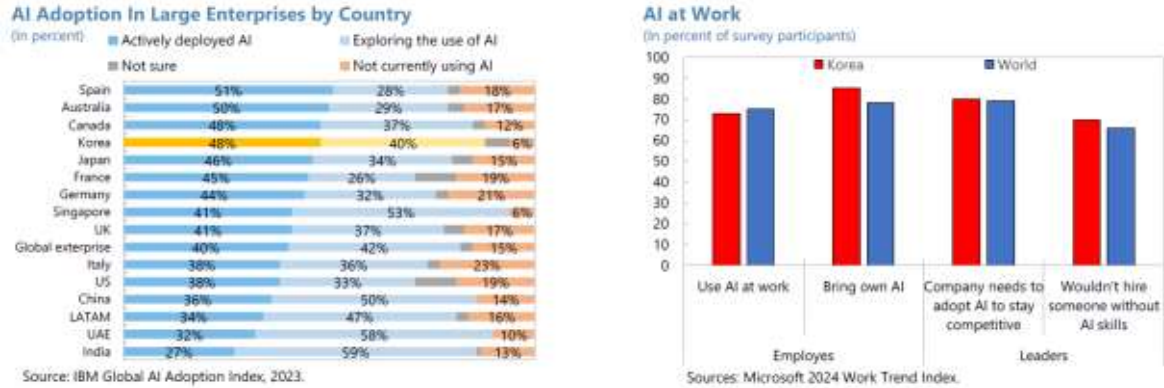
2. AI 도입

○ 한국은 AI 도입 측면에서 세계 선도국 중 하나임([그림 IV-3])

- IBM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IT 전문가 중 40%가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임
 - 또한 2023년 11월 기준, 한국 대기업 IT 전문가 중 48%가 AI를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AI를 사용하거나 탐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한국 기업은 6%에 불과하며, 이는 조사 대상국 평균인 1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한국의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Microsoft의 “2024 Work Trend Index”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 노동자 중 73%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대상 31개국을 포함한 세계 평균인 75%보다 약간 낮음
 - 한국 근로자의 약 80%는 자신이 선택한 AI 도구를 직장에 직접 가져와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78%를 상회함
- 또한 한국의 기업 경영진 중 80%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에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70%는 AI 역량이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음
 - 이들 수치는 모두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IV-3] AI 도입에서 세계 선도국인 한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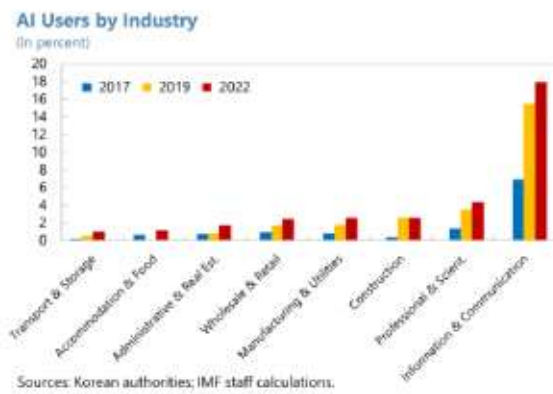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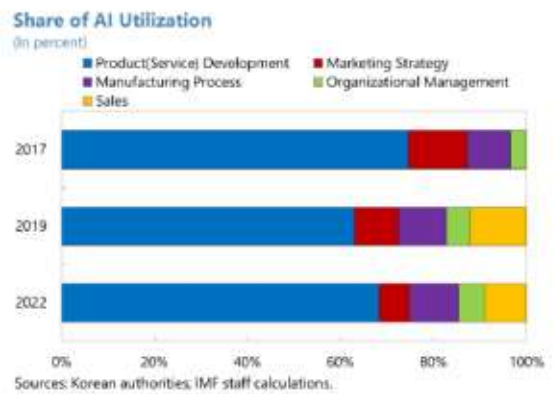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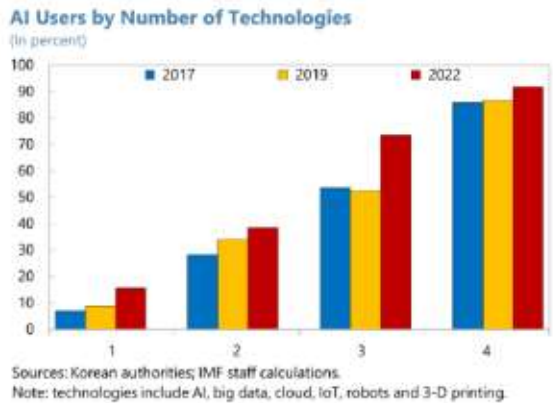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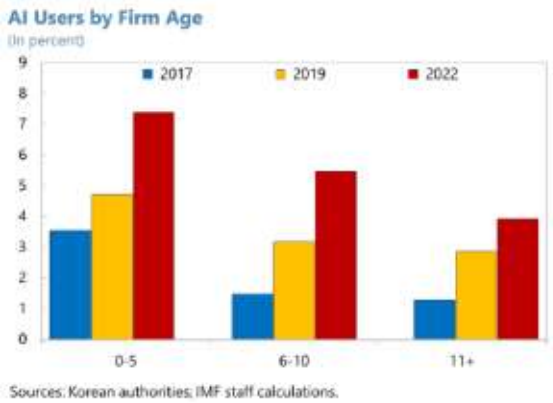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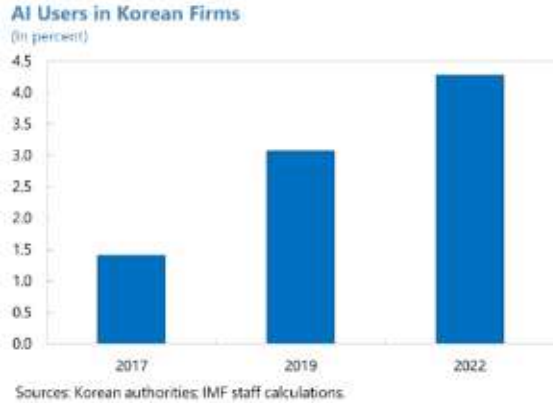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3.

○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신생 기업, 기술 관련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그림 IV-4])

- 한국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7년 1.4%에서 2022년 4.3%로 증가함
 - 이러한 증가는 기업의 규모, 업력, 산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나타남
 - 특히 자산 규모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기업, 설립 5년 미만인 신생 기업, 특허를 보유하거나 다양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기술 집약적 기업에서 AI 도입률이 높게 나타남
- 기업들은 주로 상품 개발을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뒤이어 제조, 판매, 마케팅 전략 수립, 조직 관리 순으로 활용함
-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022년 기준 약 18%로 가장 높은 AI 도입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따름
 - 이러한 모습은 OECD(2023)에서 보고된 타국 사례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IV-4] 한국 기업의 AI 사용 증가

(단위: %)



주: 기업 규모는 기업 자산 규모의 백분위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4.

○ 실증 분석 결과, AI 도입을 견인하는 데 있어 기업의 규모, 업력, 보완적 자산의 중요성이 확인됨

- AI 활용과 기업 특성 간의 무조건부 상관관계는 산업 부문 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AI 도입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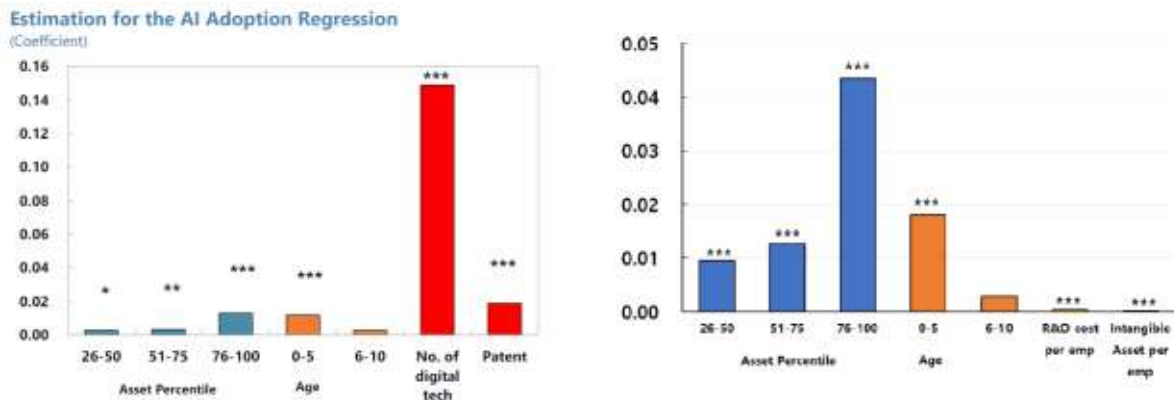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는 종속 변수로 AI 사용 여부(0-1 더미), 설명 변수로 앞서 언급된 주요 기업 특성들을 고려한 선형 확률 모형을 사용함
- 보완적 요인에는 디지털 역량(AI를 제외한 디지털 기술의 수)과 혁신성(특히 보유, 종업원당 R&D 지출, 종업원당 무형자산) 등이 포함됨
- 또한 연도 고정 효과와 산업 분류 고정 효과도 통제함

■ [그림 IV-5]에 제시된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다른 특성들을 통제했을 때 규모가 크고, 업력이 짧으며, 기술 관련성이 높고,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AI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모형 설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됨

[그림 IV-5] 회귀분석 추정 결과

(단위: 회귀계수)



주: y축은 회귀계수. 강건한 표준오차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 p<0.01, ** p<0.05, * p<0.1로 표시. 연도, 산업 고정효과는 보고하지 않음.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5.

3. 시와 노동시장

가. AI 노출도와 보완성

○ 한국의 일자리 중 약 50%가 시에 노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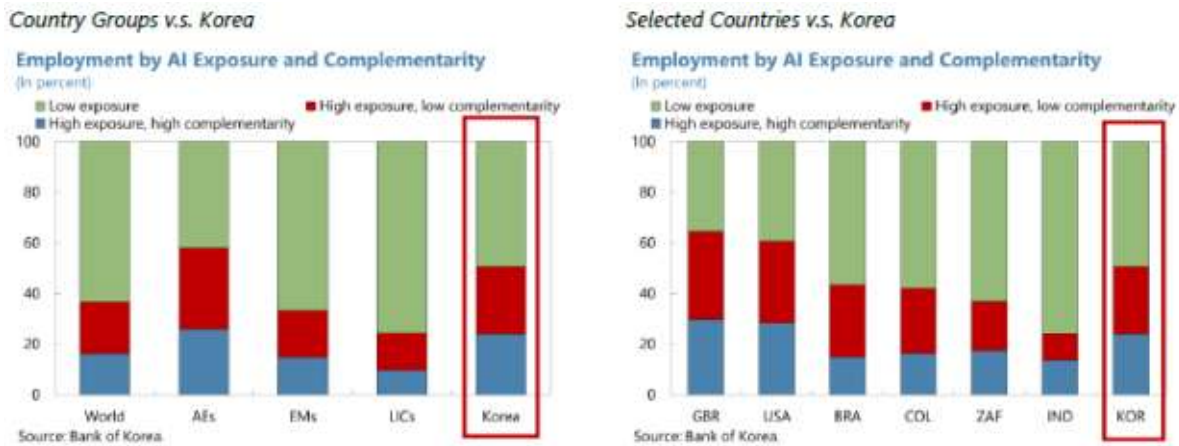
- 일자리에 대한 AI의 영향을 살펴보려면, 직업을 과업들의 집합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과업 중 어떤 것이 기술 발전에 의해 대체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임

- Cazzaniga et al.(2024)의 연구를 바탕으로, Felten et al.(2021, 2023) 및 Pizzinelli et al.(2023)에 기반한 개념적 체계를 활용하여 인간의 노동이 AI에 얼마나 노출되고 보완되는지를 측정함
 - Felten et al.(2021, 2023)은 AI에 대한 “노출도”를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기술과 AI의 능력 간의 중첩 정도로 정의함
 - 한편, Pizzinelli et al.(2023)은 직업이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AI 보완성 지수⁷⁾를 개발함
-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직업을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성”,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성”, “낮은 노출도”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함
- 한국에서는 전체 고용의 약 50%가 높은 노출도 직업군에 해당되며, 이 중 24%는 높은 보완성, 27%는 낮은 보완성으로 분류됨([그림 IV-6])
 - 한국의 높은 노출도 직업군 비율은 일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간 낮은 편임

[그림 IV-6] AI 노출도 및 보완성별 고용 비중

(단위: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6.

○ 전문직은 AI로부터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사무직은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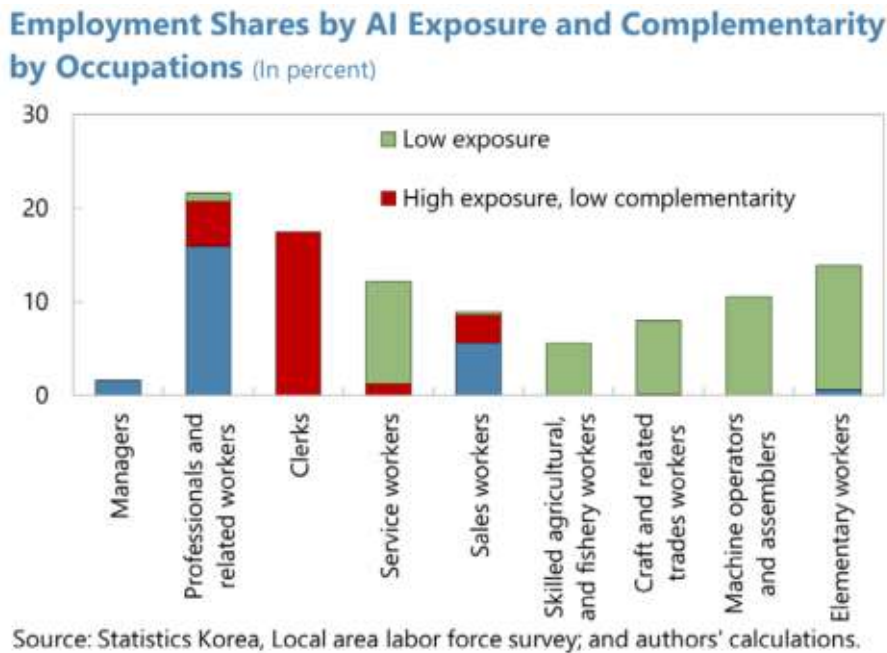
7) AI가 특정 직업을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업무를 보조할 가능성, 즉, 보완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임. 미국 직업정보시스템(O*NET)의 의사소통, 책임, 물리적 조건, 중대성, 업무 정형성, 직무 난이도 등 6개 범주형 자료를 이용해 0~1로 수치화함.

있음

- 한국은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중이 모두 높은데, 전문직은 AI에 대해 높은 노출도와 높은 보완성을 모두 갖는 반면, 사무직은 높은 노출도를 가지지만 낮은 보완성을 보임(그림 IV-7))
- 고용이 이처럼 낮은 보완성과 높은 보완성을 가진 직업군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AI가 유발하는 구조 변화로 인해 더 양극화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한편으로, 높은 노출도와 낮은 보완성을 가진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대체와 소득 감소의 위험이 큼
 -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노출도와 높은 보완성을 가진 직업군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은 AI가 가져다주는 성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

[그림 IV-7] AI 노출도 및 보완성, 직업별 고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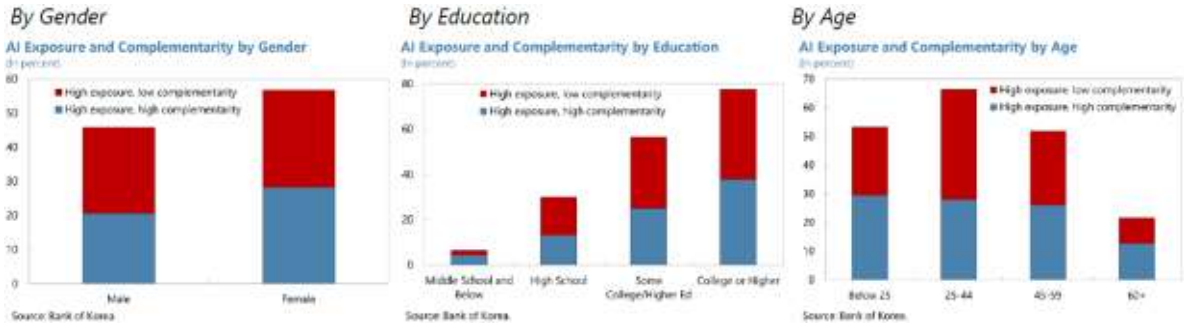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7.

- 여성, 고학력자, 청년층은 AI에 대한 노출도가 더 높지만, 이는 AI와의 보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균형을 이룸(그림 IV-8)
 - 여성은 남성에 비해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음

- 이러한 노출도는 낮은 보완성과 높은 보완성을 가진 직업군 사이에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더 큰 위험과 더 큰 기회를 동시에 직면함
- 교육 수준 측면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노출도 직업군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특히 AI와의 보완성이 높은 역할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 이는 전통적인 기술과는 달리, AI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이러한 높은 노출도의 위험은 더 높은 보완 가능성에 의해 상쇄됨
- 마지막으로, 청년층은 고령층보다 높은 노출도 직업군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큰데, 이는 주로 이들의 교육 수준이 더 높기 때문임

[그림 IV-8] 인구그룹별 높은 노출도 직업의 고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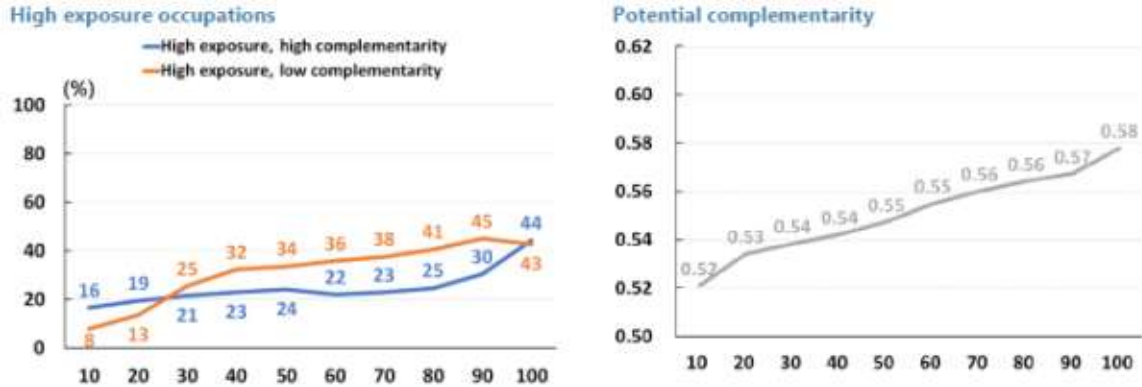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8.

○ 고소득층일수록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나, AI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또한 커짐([그림 IV-9])

-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은 노출도 직업군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함
 - 이는 중간 소득층이 일자리 대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과거 자동화 시기와 대조적임
- AI와 보완 가능성이 높은 직업 역시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음
 - 소득과 보완성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교육 수준에 대한 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는 AI로 인한 이익이 고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IV-9] 소득 분위별 노출도 및 잠재적 보완성

(단위: %, 계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9.

나. 시로 인한 전환 과정에서의 인력 재배치

○ 일자리 전환의 역사적 패턴을 살펴보면 시에 대한 적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통찰을 얻을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기술 수요와 산업 구조에 적응하게 되며, 일부는 AI와의 보완성이 높은 역할로 전환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 변화에 뒤처질 수 있음
- 이전 소절에서는 현재의 고용 구조를 기반으로 AI 노출의 정태적 단면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자들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점차 적응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적응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과거 일자리 전환의 패턴이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
- 이 소절에서는 한국의 미시 자료(한국노동패널)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이 AI 노출도와 보완성 수준이 서로 다른 직업들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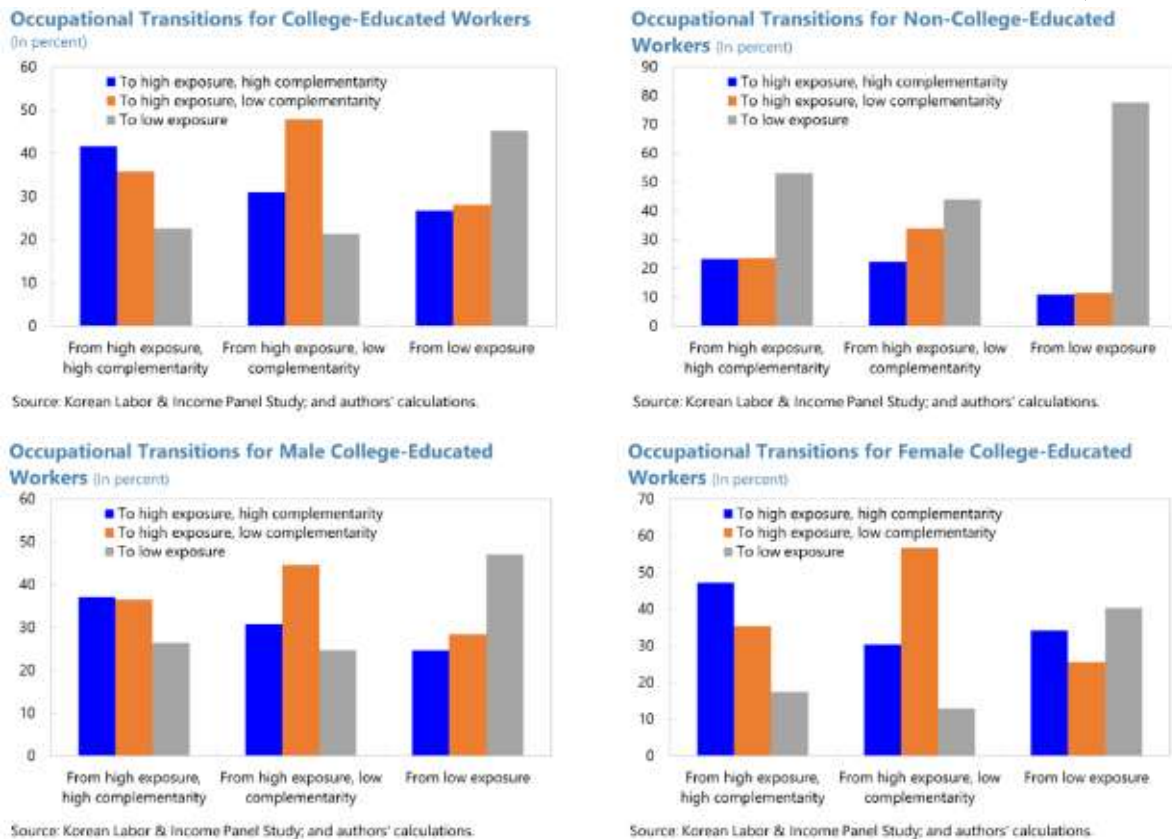
○ AI 집약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대졸자는 직업을 변경하더라도 유사한 직종 범주 내에 머무는 경향이 있음([그림 IV-10])

- 직업 전환 확률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시간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패턴을 보임
 - 이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함

- 또한, 낮은 보완성 직업을 떠나는 이들 중 31%가 더 높은 AI 보완성을 가진 직업으로 이동함
 - 이는 일자리 사다리(job ladder)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임
 - AI 기술이 확장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임
- 흥미롭게도, 여성 노동자는 이전 직업의 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남성보다 높은 노출도 및 높은 보완성(high-exposure, high-complementarity; HEHC) 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반면, 대졸 미만 노동자는 대부분 AI 노출도가 낮은 직업군에 머물며, 높은 보완성 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음

[그림 IV-10] 노동자의 직업 전환

(단위: %)



주: 2009~2022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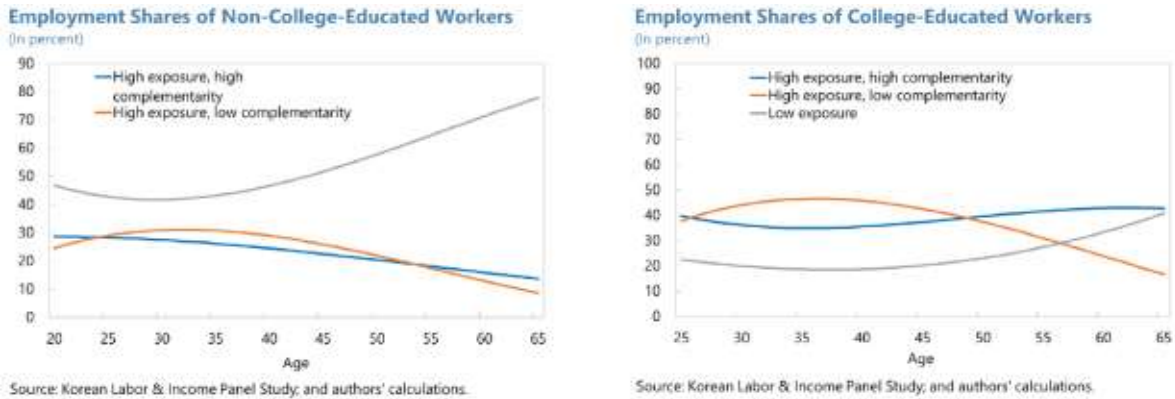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0.

○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낮은 보완성 직업과 높은 보완성 직업 간의 이동성은 제한적이었음([그림 IV-11])

- 대졸 미만 그룹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노출도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반대로 높은 노출도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함
- 유사하게, 대졸 그룹에서도 50세 이후에는 높은 노출도 및 낮은 보완성(high-exposure, low-complementarity; HELC)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낮은 노출도 직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함
-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업으로 전환하게 됨을 시사하며, 이는 은퇴 직전 또는 직후에 수작업 중심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그림 IV-11] 교육 수준별 각 고용 비중의 생애 주기 프로파일

(단위: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1.

○ 고령 노동자는 직업 이동성에 적응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직 이후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는 것에서 확인됨([그림 IV-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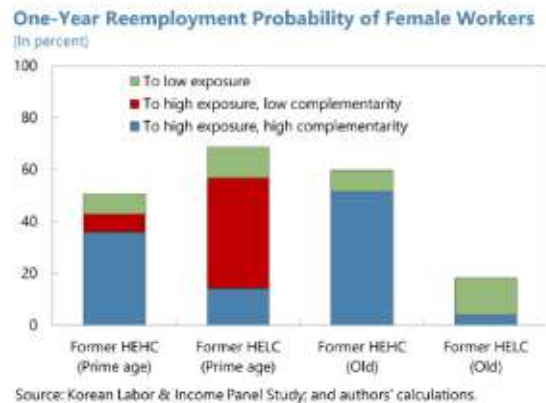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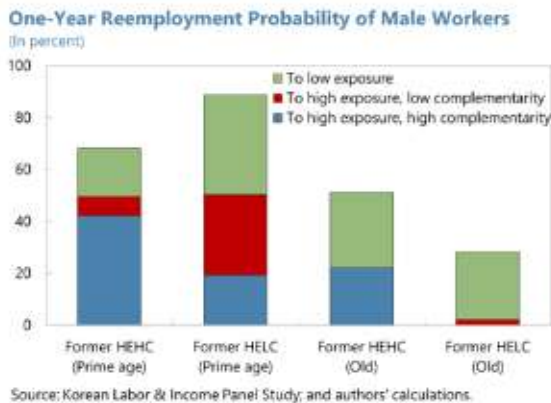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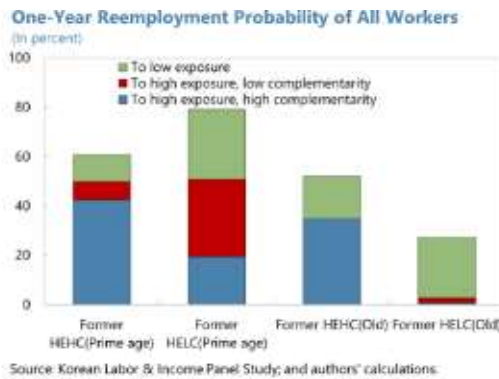
- 지난해 실직자 중 전성기 연령대의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1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더 수월한 경향을 보임
 - 예를 들어, HEHC 직업에 종사했던 고령 노동자 중 35%만이 같은 범주의 직업으로 재취업한 반면, HEHC에 종사했던 전성기 연령대 노동자는 43%가 같은 직업군으로 돌아감
 - 또한, 과거 HELC 직업에 종사했던 고령 노동자 대부분은 높은 노출도 직업으로

재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들 중 단 25%만이 낮은 노출도 직업에 재취업함 - 이에 비해, 전성기 HELC 종사자의 경우 31%는 동일 직업군으로 재취업했고, 19%는 HEHC 직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함

- 이러한 결과는 고령 노동자가 AI로 인한 일자리 재배치에 적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적으로 재취업률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HEHC 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음

[그림 IV-12] 퇴직자의 1년 내 재고용 확률

(단위: %)



주: 2010~2022년 평균값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2.

4. AI, 생산성과 산출

가. 모형 추정: 생산성과 산출에 대한 시와 고령화의 영향

○ 모형 기반 분석을 통해 AI의 잠재적 영향을 세 가지 경로로 탐색함

- AI 도입이 생산성과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Cazzaniga et al.(2024)에서 설명된 과업 기반 모형을 사용함
- 이 모형에서 AI는 (i) 노동 대체, (ii) 노동 보완, (iii)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효과를 미침
 - 첫째, AI 도입은 일부 직업을 인간에서 AI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직무 수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노동 수요를 감소시킴
 - 둘째, AI 도입은 일부 직업에서 인간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보완할 수 있음
 - 셋째, AI 도입은 모든 직업에 걸쳐 광범위한 생산성 향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노동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모형을 한국 내 직업의 AI 노출도 및 보완성 추정치를 활용해 보정함(calibration) (3소절 참조)

○ AI의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하에서 측정함

-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AI 도입은 노동 대체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시나리오 1에서는 AI가 노동 보완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침
- 시나리오 2에서는 AI가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침
- 시나리오 3에서는 AI의 추가적인 영향이 노동 보완과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 등 두 경로 모두를 통해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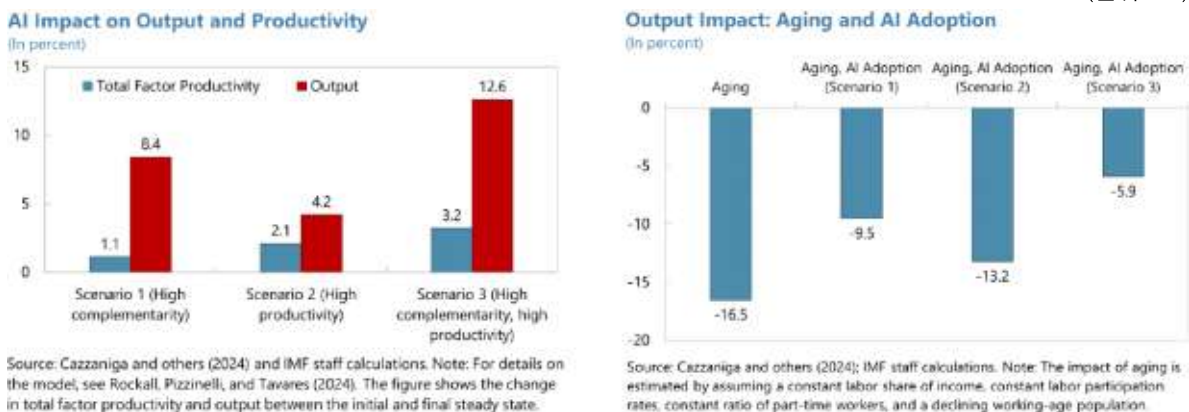
○ AI 도입은 특히 높은 노동 보완성과 높은 생산성이 결합된 시나리오 3에서 생산성과 산출 면에서 상당한 증가를 야기함

- [그림 IV-13]의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나리오 1에서는 AI 도입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 1.1% 상승하고 산출이 8.4% 증가함
- 시나리오 2에서는 TFP가 2.1% 상승하고 산출은 4.2% 증가함

- 시나리오 3에서는 AI 도입으로 TFP가 3.2% 상승하고 산출은 12.6%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범용 기술의 도입 사례와 같이, 생산성과 경제적 결과에 대한 AI의 영향과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함
- 기존 연구들은 AI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Briggs and Kodnani(2023)는 미국의 TFP가 향후 10년간 9.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 Cazzaniga et al.(2024)은 TFP 효과가 1.3~3.9%일 것으로 예상함
 - 반면, Acemoglu(2024)는 TFP 효과가 훨씬 작아 0.53~0.66% 범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그림 IV-13] 생산성과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 AI, 배분적 효율성, 고령화

(단위: %)



주: 왼쪽 그림은 초기상태와 최종 균제상태 간 총요소생산성 및 산출 변화. 오른쪽 그림은 노동소득분배율 유지, 경제활동참여율 유지, 비전일제 비중 유지, 생산가능인구 하락을 가정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3.

○ 고령화 인구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AI 도입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 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 규모를 줄이고, 일부 노동력을 청장년 전일제 근로자에서 고령의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두 가지 모두 전반적인 노동 투입을 감소시킴
 - UN의 인구 추계에 기반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성별 및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산출이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AI 도입에 따른 산출 증가 효과는 이러한 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음
 - [그림 IV-13]의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AI 도입은 고령화로 인한 산출 감소를 다양한 수준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 가장 큰 보완 효과는 AI가 세 가지 경로 모두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 3에서 나타남

나. 실증분석: 시가 한국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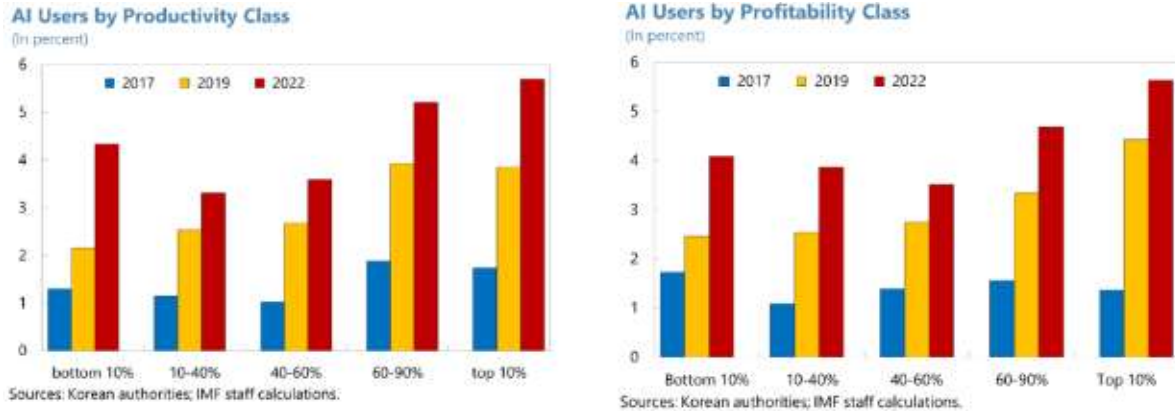
○ AI 활용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서 더 활발함

- AI 활용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 특히 생산성과 수익성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들을 성과 분포의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다섯 그룹으로 분류함
- 이 백분위수는 산업별 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 내에서 SNA A38 분류⁸⁾에 따라 계산됨
- 기업의 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매출로 측정되고, 수익성은 종업원 1인당 순이익으로 측정됨
-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그림 IV-14])

8) SNA A38은 국가 회계를 위한 포괄적인 체계인 국민 계정 체계(SNA) 내의 특정 산업 분류를 의미함. 특히 제조업 및 비금융 시장 서비스의 생산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됨. 이 분류는 세부 통계 분석을 위해 산업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부문과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

[그림 IV-14] AI 활용과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단위: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4.

○ 그러나 AI 도입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룹 간 균일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특히 2022년에는 그 차이가 뚜렷함

- 생산성과 수익성 분포에서 하위 10%에 속한 기업들의 AI 활용 비율은 10~40% 및 40~60%에 속한 기업들보다 더 높음
- 이러한 낮은 성과 그룹에서의 높은 AI 도입률은 2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AI 스타트업의 높은 비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규 진입 기업은 평균 생산성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Berlingieri et al., 2020)을 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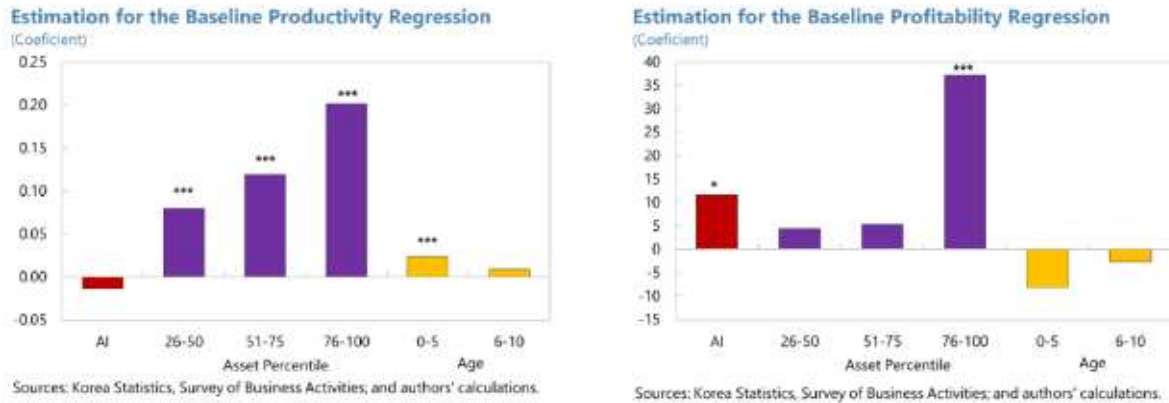
○ 주요 기업 특성을 고려할 때, AI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강건하지 않음

- 2017~2022년 기업활동조사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준선 회귀분석을 수행함
-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기업의 생산성 또는 수익성이며, 설명변수로는 AI 활용 여부, 자산 규모, 기업 업력이 포함됨
- 또한 두 자리 산업 분류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잠재적인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시차항(t-1)을 포함함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AI 도입은 기업의 생산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익성에는 양(+)의 영향을 미침([그림 IV-15])

- 자산 규모가 큰 기업(상위 75% 이상)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존 문헌과 일치함

[그림 IV-15] 생산성 및 수익성 회귀분석 추정 결과

(단위: 회귀계수)



주: y축은 회귀계수. 강건한 표준오차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 p<0.01, ** p<0.05, * p<0.1로 표시. 연도, 산업 고정효과는 보고하지 않음. AI 사용은 더미 변수로 처리. 자산 규모는 25백분위수 미만, 26~50백분위수, 51~75백분위수, 75백분위수 이상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 기업 업력은 0~5년, 6~10년, 11년 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5

○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규모가 크고 업력이 오래된(mature) 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식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하는 기업일수록 AI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투자 자체가 AI와 무관하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AI 활용과 기업 성과 간 관측된 관계는, AI가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특성이 선택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지식 자본 투자 지표인 R&D 비용과 무형자산을 추가 통제변수로 포함함
 - 이 두 변수는 더미 변수로 처리되어, 0은 해당 항목이 없음을, 1은 존재함을 의미함
- 또한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I 도입은 규모가 크고 업력이 낮은 기업에서 더 흔하게 나타남
 - AI 확산의 효과가 기업의 규모와 업력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I 활용

변수와 이들 특성 간 교차항을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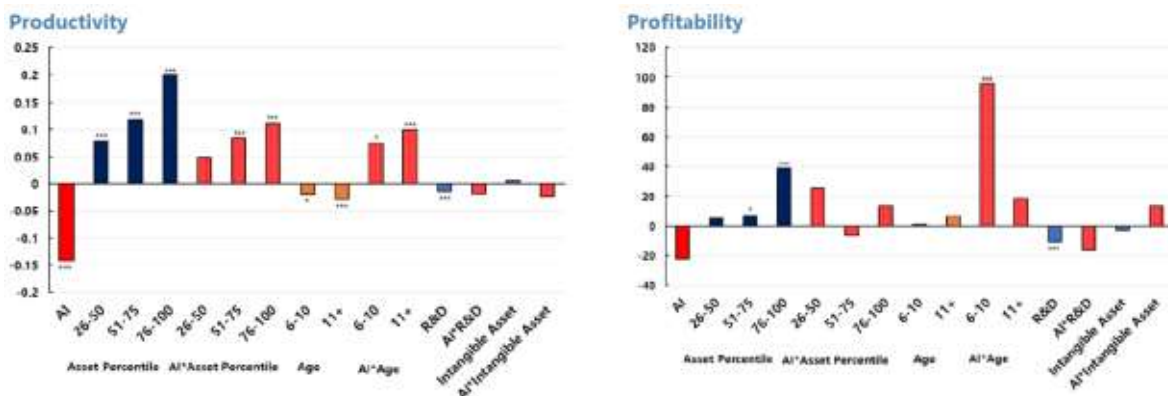
- 이 접근 방식은 AI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규모와 업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규모가 크고 성숙한 기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그림 IV-16])

- 수익성 측면에서도, AI 도입에 따른 이익은 특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의 크고 오래된 기업들이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에서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시사함
- 잠정적이지만, AI의 발전이 기업 간 생산성과 소득 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IV-16] 확장된 생산성 및 수익성 회귀분석 추정 결과

(단위: 회귀계수)



Sources: Korea Statistics,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and authors' calculations.

주: y축은 회귀계수. 강건한 표준오차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 p<0.01, ** p<0.05, * p<0.1로 표시. 연도 고정효과는 보고하지 않음. R&D, 무형자산은 더미 변수로 처리.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6.

○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산업 부문별로도 뚜렷한 이질성을 보임

-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별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함
- 구체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식별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함
- 분석 결과,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특정 산업 부문 내의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음([그림 IV-17])
 -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문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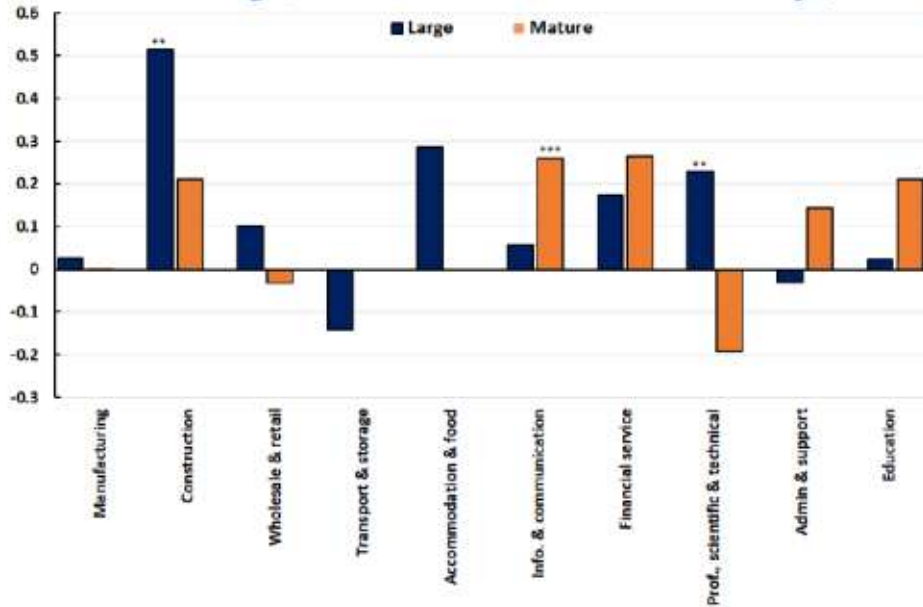
향상이 관찰됨

- 또한, 정보통신업 부문에서는 오래된 기업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가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AI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생산성 증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시사함
-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과 유사하게, AI 도입은 산업 및 기업 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이질성은 AI에 대한 노출 수준 차이를 포함한 각 산업 및 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

[그림 IV-17] 산업별 AI 효과와 노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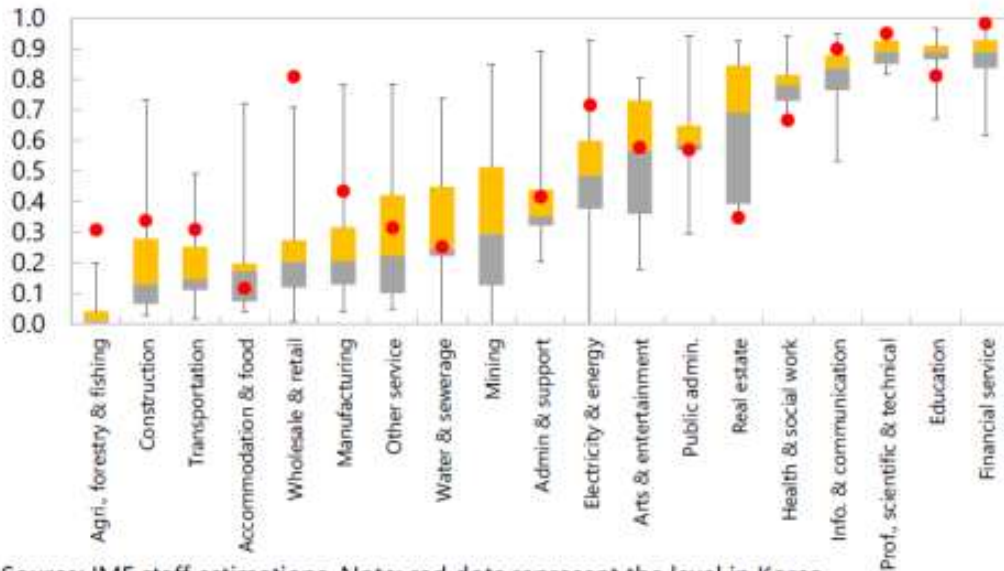
(단위: 회귀계수)

Estimation for the Coefficients of Interaction Terms
between AI use and Large, Mature Firms on Firm Productivity (Industry level)



Share of Highly Exposed Workers by Sector

(In share of all workers)



Source: IMF staff estimations. Note: red dots represent the level in Korea.

주: 위 그림의 y축은 회귀계수. 강건한 표준오차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 $p < 0.01$, ** $p < 0.05$, * $p < 0.1$ 로 표시. 교차항은 자산규모더미(50백분위수 이상이면 1)와 업력 더미(6년 이상이면 1)를 이용해 계산.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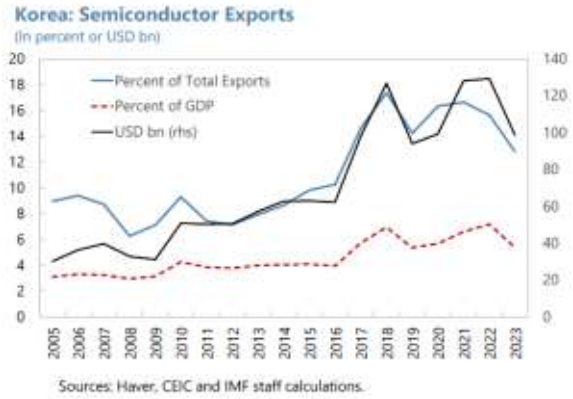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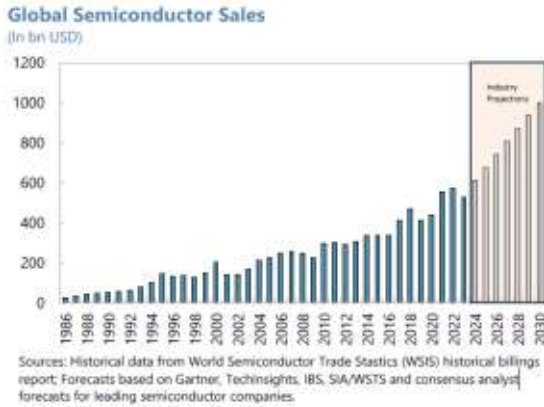
다. 정형화된 분석: 세계 AI 호황과 한국 반도체 산업

○ 한국은 세계 AI 호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AI 도입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생산성과 산출 증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반도체 수출을 통해 세계적인 AI 수요 증가의 이익을 볼 것이며, 이는 고용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 산업 컨센서스 전망에 따르면, AI 관련 반도체 수요는 2030년까지 칩 판매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여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그림 IV-18)
- 한국이 현재의 시장 점유율(전 세계 반도체 판매의 약 20%)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AI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그림 IV-18] AI가 유발한 수요와 한국의 반도체 수출

(단위: 10억달러,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8.

5. AI 준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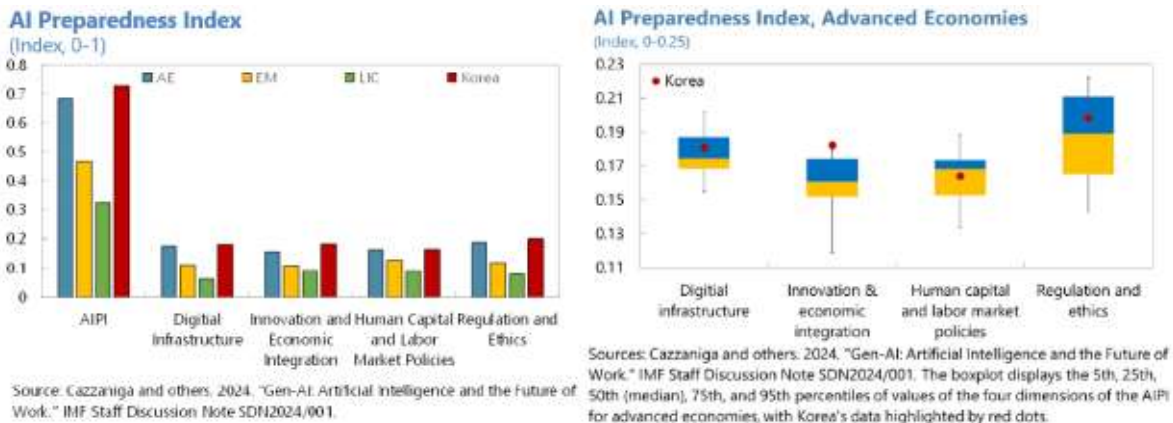
○ 한국은 AI 도입에 잘 대비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선진국 평균을 상회함

- 한 국가의 준비 수준은 AI로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하방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함

- 한국의 AI 도입 준비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AI 준비 지수(AI Preparedness Index, AIPi)를 활용함
- Cazzaniga et al.(2024)이 개발한 AIPi는 기술 확산의 국가 간 결정 요인에 관한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됨
 - 이 지수는 AI 도입에 필수적인 일부 거시-구조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디지털 인프라, (2) 혁신 및 경제 통합, (3)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4) 규제 및 윤리 등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함
- 한국은 종합 지수와 네 가지 범주 중 세 가지에서 선진국 중앙값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임([그림 IV-19])

[그림 IV-19] AI 준비 수준

(단위: 지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9.

- 한국은 혁신과 디지털 역량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범주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한국은 “혁신 및 경제 통합”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AI 관련 과학 연구에서의 선도적 위치,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막대한 R&D 투자, 그리고 무역·투자·협력을 통한 세계 경제로의 통합에서 강점을 보임
 - 한국의 “규제 및 윤리” 대비 수준은 선진국 중앙값을 상회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정부 효율성을 반영함
 - “디지털 인프라” 대비 수준은 선진국 중앙값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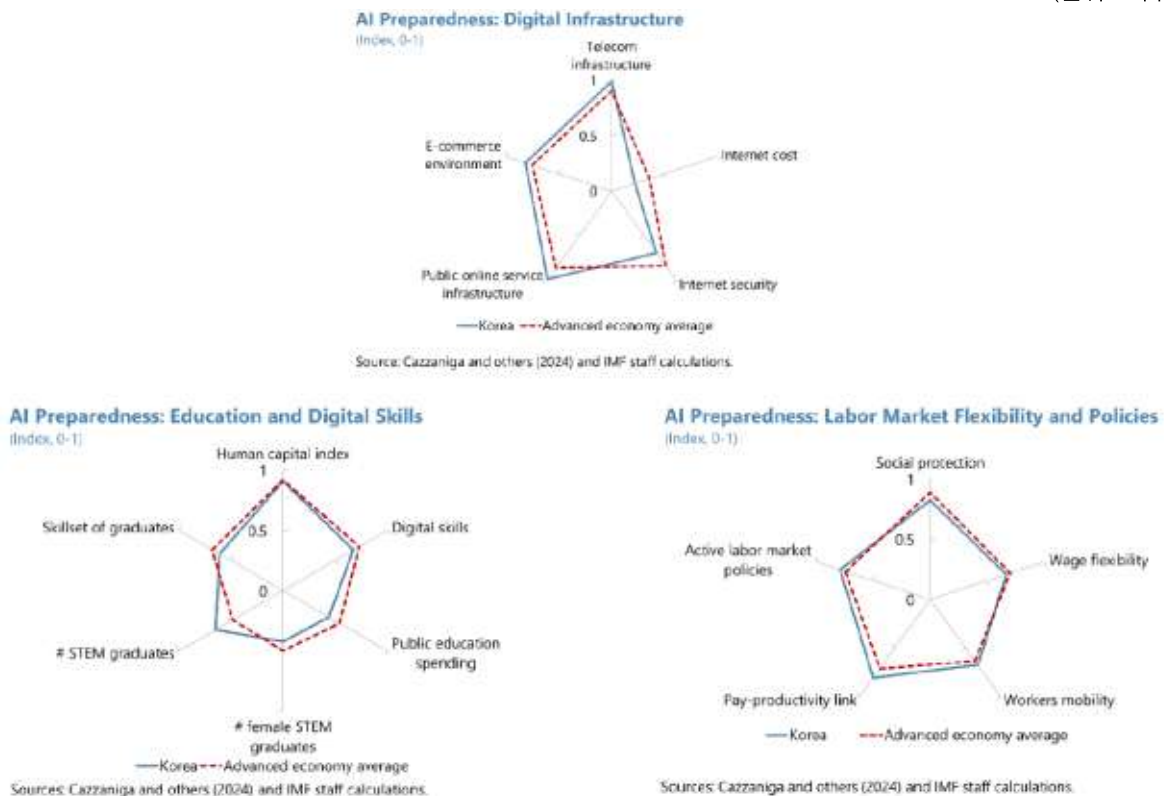
- 이 부분의 하위 지표들은 한국의 뛰어난 통신 인프라, 성숙한 전자상거래 환경, 그리고 강력한 공공 온라인 서비스를 강조하며, 이는 모두 AI의 경제활동 통합을 강하게 촉진함
- 그러나 인터넷 접근의 비용과 보안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그림 IV-20, 상단 그림)

■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대비 수준은 선진국 중앙값보다 다소 낮음

- 인적 자본의 하위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고학력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지출을 늘리고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여지가 있음(그림 IV-20, 좌하단)
- 노동시장 정책에서 가장 큰 개선 여지를 나타낸 영역은 (1)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호 제도의 강화, (2) AI에 따른 변화에 기업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그림 IV-20, 우하단) 분야임

[그림 IV-20] 하위 분류별 AI 준비 지수

(단위: 지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20.

○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련의 국가 이니셔티브와 국가 AI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당국은 AI 전략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AI 인프라 확대, 민간 투자 유인, 광범위한 도입 촉진, 그리고 위험 관리 조치 시행이 포함됨
- 인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AI 관련 분야로 전문가를 훈련 및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음
- 정부는 국내 인력 개발을 넘어 외국 전문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증가하는 AI 전문성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음
- 또한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규율하기 위한 AI 기본법 도입을 위한 법안이 논의 중임(참고 IV-1)
- 앞으로 광범위한 AI 도입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함
- 타기팅된 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부문별 교육 및 견습 과정을 포함)에 대한 자금 지원 외에도, 재정정책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사회안전망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적용 확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급여 수준 향상 등을 포함하며, AI 전환에 특히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대비를 도울 수 있음

[참고 IV-1] 한국의 AI 관련 정책 및 규제

- 한국에서는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윤리 기준 수립과 AI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포함해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도입이 진행 중임
- 국가 AI 위원회의 설립과 국가 AI 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 발표는 중요한 진전임
 - 이러한 정책 방향에는 (1)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 및 AI 인프라 확장, (2) 정책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AI 개발 투자 장려, (3)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도입 촉진, (4) AI 기본법 제정을 통한 AI 관련 위험 관리가 포함됨
 - 향후 주요 과제로는 AI 스타트업과 인재 양성, 핵심 기술 및 혁신 발전, 지속가능한

AI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AI 책임과 권리에 대한 법적 원칙 마련 등이 있음

○ 또한 정부는 인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특히 K-Digital Training(KDT) 프로그램과 같이 AI 전문인력의 교육과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KDT는 교육기관,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임

■ 또한 2024년 7월에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AI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제시됨

- 이 계획에는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전문가 유치를 포함하여, 첨단 분야 특화 대학의 확장, 사내 대학원 과정 인증, 특별 비자 옵션 탐색, 영주권 및 귀화 절차의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됨

○ 국회는 AI 개발과 활용을 규율할 AI 기본법안을 도입하고 있음

■ 이 법안의 핵심 요소에는 AI 위원회 설립,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 촉진, AI 개발 및 활용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윤리적 원칙의 수립 등이 포함됨

6. 결론

○ AI의 도입은 상당한 산출 및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을 지님

■ 한국은 AI 도입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국가이며, 점점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AI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도입률은 대기업, 신생 기업, 기술 역량이 강한 기업들에서 더 높게 나타남

■ AI가 직무 기능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시나리오 하에서, AI 도입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생산성과 산출을 각각 약 3%와 13% 증가시켜 인구 고령화가 산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음

■ 더욱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은 세계 AI 호황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 AI 수요는 2030년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생산성과 산출의 향상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기업 수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규모가 크고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며, 이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당한 생산성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AI 혁신 및 통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적절한 규제 체계를 발전시키면 AI의 잠재적 이익을 온전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AI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면서 그 이익이 더 광범위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기팅된 정책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한국은 선도적인 혁신 역량과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준비 수준이 높음
 - 그러나 특히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 정책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AI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 도전 과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
 - IMF 연구진은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이 AI에 높은 정도로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함
 - 일부 계층은 AI 도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
 - 여성, 청년, 고숙련 및 고소득 계층은 AI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동시에 AI 도입으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
 - 심화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노동자, 특히 고령층이 직업을 전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함
 - 당국은 AI 개발 및 도입을 진전시키고 AI 인재 풀을 확대하며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옴
 - 기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AI 도입으로 얻는 이익을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하기 위해 향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타기팅된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V

주요 쟁점- 변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 속의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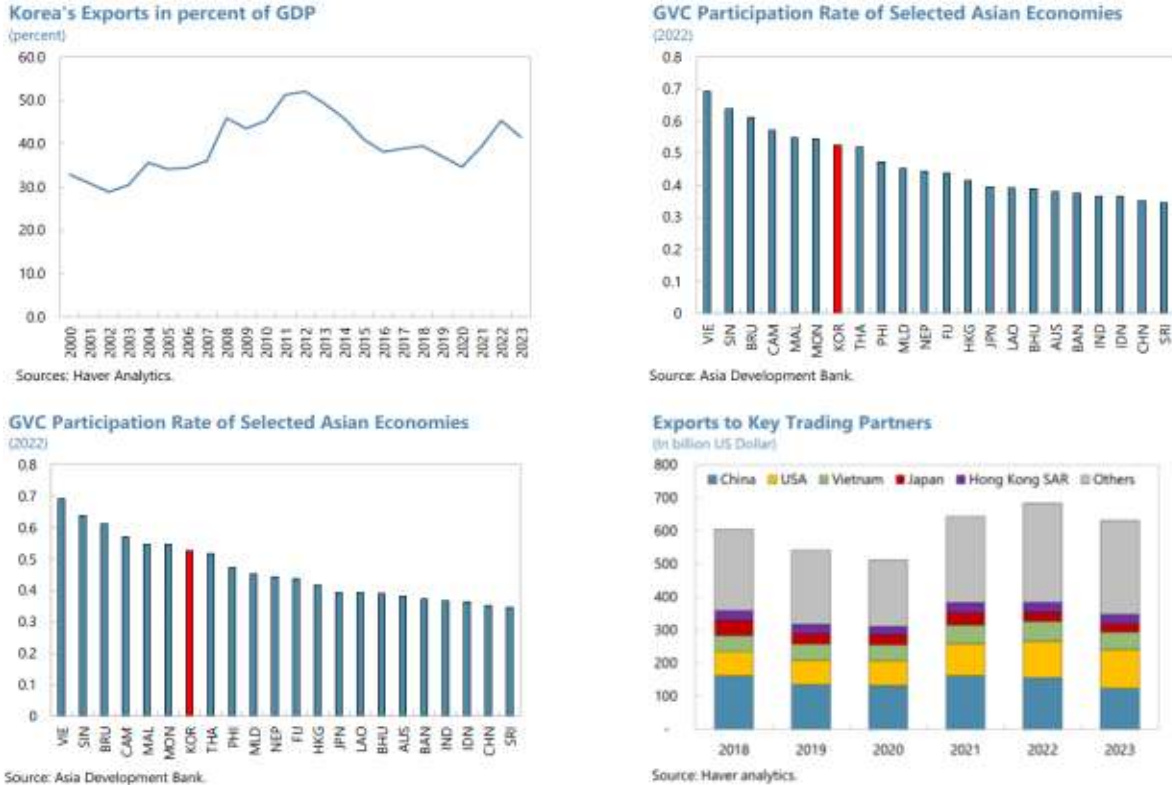
1. 서론

○ 개방 경제이자 수출 강국인 한국은 국제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음

- 한국은 2023년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GDP 대비 수출이 약 40%를 차지함
- 한국 경제는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과 고도로 통합되어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GVC 참여율을 보임
 - 반도체와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출 품목이며, 각각 한국 전체 수출의 거의 20%와 12%를 차지함
 - 기타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선박 및 부품, 가전제품, 철강판 등이 있음
-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과 중국임([그림 V-1])
 - 한국과 중국 간에는 가치 사슬 통합도가 높으며,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 중 상당 부분은 소비자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쓰이는 반도체임
 - 중국은 또한 한국 수입품의 최대 원산지임
- 한국은 세계 및 지역 무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85%를 포괄하는 59개국에 적용되는 21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을 발효 중임

[그림 V-1] 한국의 수출

(단위: %, 지수, 10억달러)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1.

○ 세계 무역 환경은 지리적·경제적 분절과 산업정책의 부상에 의해 재편되고 있음

-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과거 세계화 이익의 불균등한 분배는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론을 증가시키고 내부지향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
 - 브렉시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관계에 도전이 되고 있으며, 정책 주도의 세계 경제 통합 역전, 즉 지리적·경제적 분절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정책이 최근 몇 년간 재부상하고 있음
 -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된 국제 문제 증가와 지정학적 경쟁 심화는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킴
- 2017년과 2018년에 무역 제한 조치가 급증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증가했음
- 최근 산업정책의 물결은 경쟁력,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회복, 국가 안보 등의 고려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

- 2023년에는 산업정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군·민 겸용 제품과 첨단 기술 제품(반도체 및 저탄소 기술 포함), 그리고 이들의 상류(upstream) 투입재(핵심 광물 등)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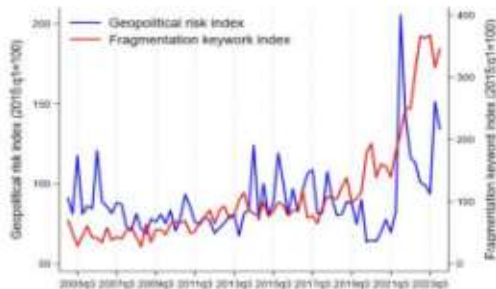
○ 세계화 둔화는 한국의 수출 성장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함

- 세계화 둔화는 흔히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이라 불리며, 세계 금융 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현상임(Antras 2021; Baldwin 2022)
 - 세계 GDP 대비 세계 무역은 정체 상태를 보여왔으며, 세계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고점 대비 급격히 감소했음([그림 V-2])
- 이처럼 장기화된 슬로벌라이제이션 국면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균열을 따라 분절된 무역 및 자본 흐름과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의 세계적 부활이 중요한 기저 요인으로 작용함([그림 V-3])
- 본 장에서는 지정학적 분절과 산업정책이 한국 상황에서 국제무역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함
 - 이를 위해 한국과 특히 관련이 깊은 주요 동향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긴장의 심화 및 한국의 주요 수출 부문에서 나타나는 산업정책의 세계적 확대 등에 초점을 둠

[그림 V-2] 지리적·경제적 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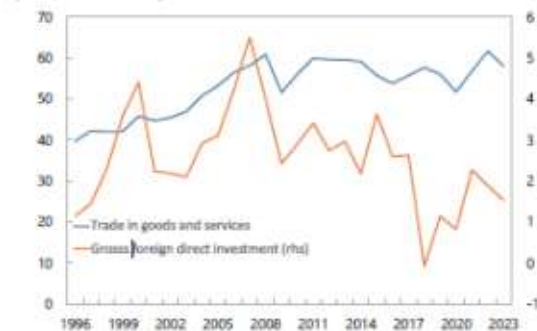
(단위: 지수, GDP 대비 %)

Measures of Geopolitical Risk and Fragmentation



Source: Gopinath et al (2024).

Slowbalization
(Percent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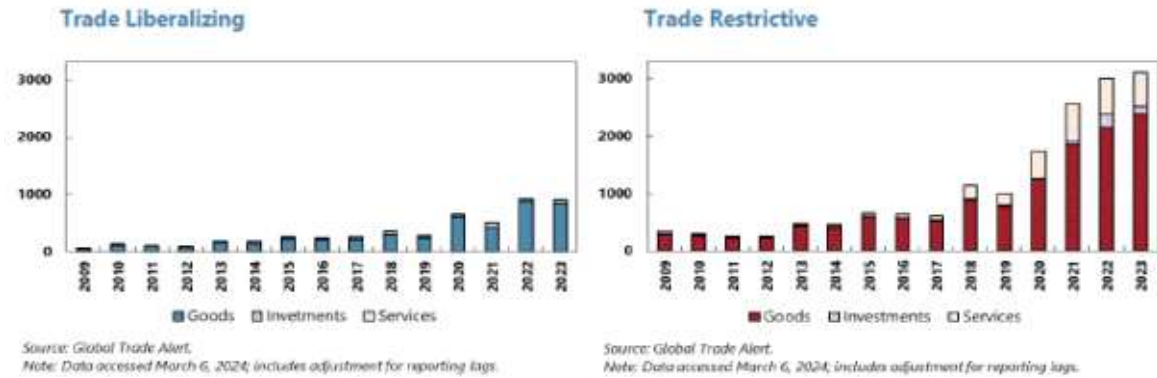


Source: WEO and IMF staff's calculation.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2.

[그림 V-3] 세계 무역 정책 조치

(단위: 개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3.

2. 미-중 무역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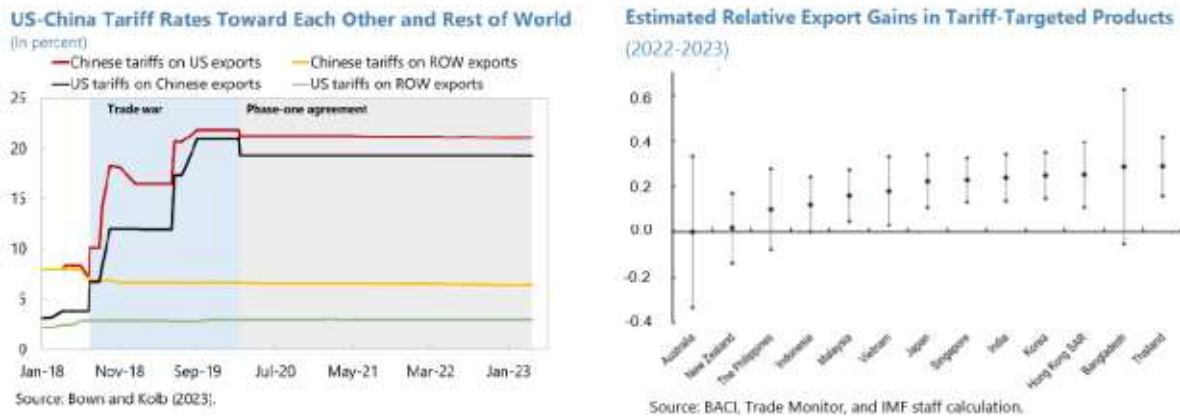
- 한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상승 추세에는 미-중 무역 긴장이 기여하고 있음
 - 2018년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 긴장은 양국 간의 직접 무역을 상당히 감소시켰고 공급망 재편을 유도했음
 -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평균적인 '제3국(bystander country)'은 미-중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비대상 품목보다 세계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Fajgelbaum et al, 2023; Dang et al, 2023)
 - 한국의 경우에도 미-중 관세 대상 품목의 수출이 비대상 품목에 비해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한국과 중국 기업이 직접 경쟁하는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음
 - 다만, 관세로 인한 한국 전체 수출의 대미 시장 점유율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음
 - Lovely, Xu, and Zhang(2021)은 2019년 말까지 한국의 미국 제조업 수입 시장 전체에서의 점유율이 0.9%p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가 적용된 품목에서의 점유율은 1%p 증가했다고 추정함
 - 그러나 무역 혼란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은 이러한 단기적 이익보다 클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전체 수출 중 대미 비중은 2010년대에 증가해 왔으며, 이는 미-중 무역 긴장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들을 반영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미-중 무역 긴장이 여기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기준으로 대미 수출 비중은 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임([그림 V-4])

[그림 V-4] 미-중 무역 긴장

(단위: %, 지수)



주: 오른쪽 그림은 2018~2019년 동안 미국 또는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의 예측 수출 증감(로그 기준)을 각 국가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당 품목 수출의 변화율을 다른 품목과 비교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4.

○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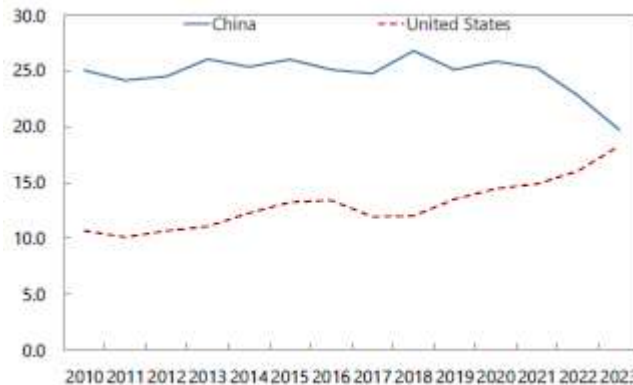
- 무역 긴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 시장의 두 배 이상이었음
- 그러나 이 비중이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그림 V-5]), 이는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된 데 더해,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효과도 반영된 결과임
- 한국의 대미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에서 중국도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임
 -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약 80%는 중국 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임
 - 이들 제품의 상당 부분은 최종적으로 중국산 수출품의 형태로 미국으로 운송됨
- 따라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수요도 함께 감소하게 됨
 - 한국은행은 2018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출 관련 생산을

약 3% 감소시켰다고 추정함

- 또한 관세 인상은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대체 시장을 찾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미국 외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수출 기업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생산업체들이 미국 외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경쟁은 일정 부분 상쇄됨

[그림 V-5] 한국 수출 비중

(단위: 총수출 대비 %)



Source: Haver Analytics and IMF staff calculation.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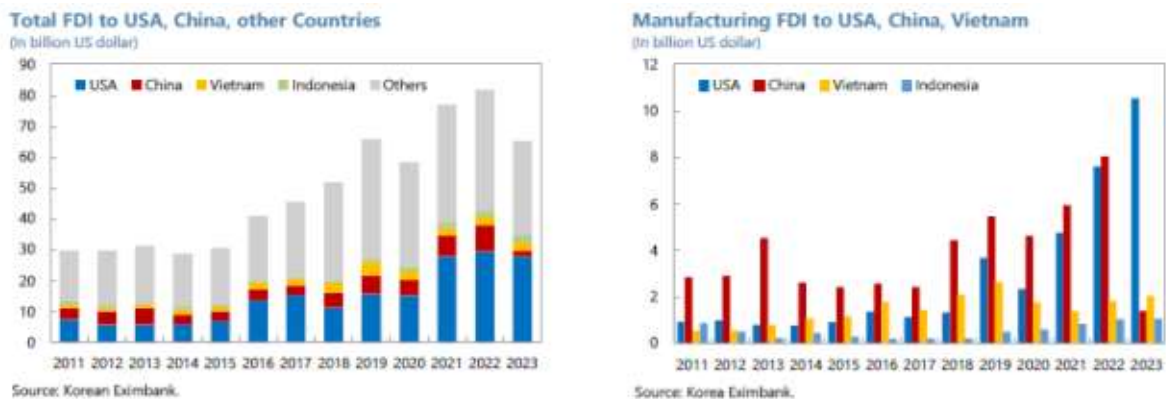
○ 최근의 기술 수출 제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동시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장기적인 과제를 초래함

- 이러한 제한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시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반도체 생산량의 40% 이상이 이들 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해당 시설을 더 정밀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 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경쟁력을 잃고 있음
- 최첨단 메모리 칩의 대중 판매 제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함
- 그러나 이러한 기술 제한은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일정 부분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었음
-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이 2023년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핵심 광물의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은 추가적으로 교란을 겪고 있음

- 광물 조달에 대한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전기차 산업은 도전에 직면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 공급업체에 의존하던 한국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대체 조달처를 찾아야 했으며, 그 결과 비용이 상승함
 - 이러한 조달 제한의 또 다른 잠재적 효과로,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 광물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 무역 긴장은 한국의 FDI 패턴 변화로도 확인되고 있음
 - 총 대미 FDI는 무역 긴장 이전 수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이러한 증가가 두드러짐
 - 반면, 대중 FDI는 지난 5년간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급격히 감소했음
 - 한국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FDI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된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그림 V-6])

[그림 V-6] 한국의 FDI

(단위: 10억달러)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6.

3. 산업정책과 한국의 전략 산업

○ 주요 국가들의 최근 산업정책은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 및 전기차 등 전략 산업에 집중되고 있음

■ 주요 정책을 <표 V-1>에 정리함

<표 V-1> 교역국별 반도체 및 전기차 관련 주요 산업정책

국가	계획	주요 조치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2022)	R&D 및 반도체 생산에 10년간 약 2,780억달러를 투자 미국의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인력 양성을 위해 527억달러를 제공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제조를 위한 자본 지출에 대해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 수혜 기업이 중국 및 우려 대상 국가들에 특정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
미국	Inflation Reduction Act (2022)	세제 개편을 통해 증가된 7,390억달러의 세수를 통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3,690억달러,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에 640억달러, 10년에 걸친 재정 적자 감축에 3,000억달러 이상을 투자 특히 청정에너지 차량 구매에 대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 그중 3,750달러는 주요 광물 요건 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배터리에 사용된 주요 광물의 일정 비율(가치 기준)이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정제되었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함 나머지 3,750달러는 배터리 부품 요건 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구성 요소 중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부품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EU	European Chips Act (2023)	반도체 분야의 연구 및 혁신에 관한 기존 프로그램과 조치에 430억유로 이상을 투자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로 확대
일본	The Strategy for Semiconductors and the Digital Industry (2021)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257억달러를 투자 8개의 주요 일본 기업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정부 지원 반도체 벤처기업인 Rapidus를 설립
중국	Made in China 2025 (2015)	핵심 소재의 중국산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증가
중국	National integrated Circuit Industry Fund	국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1단계(2014~2019년) 218억달러, 2단계(2019~2024년) 291억달러, 3단계(2024~2039년) 475억달러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Table 1.

○ 이러한 산업정책은 한국의 대미 투자 및 투자 관련 수출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한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보조금 및 세액공제 이점을 활용하고 최종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및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표 V-2〉)
-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확장은 건설기계 등 한국 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최근 세계 제조업 둔화 국면에서도 한국 수출의 견고한 성장을 견인함
- 공급망, 인력 개발, R&D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심화는 한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반면, CHIPS 법의 수혜 기업들(한국 기업 포함)은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guardrails)”에 따라 중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됨
 - 이러한 제한은 중국 내 대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우려 사항이며, 미국 내 시설 구축을 위한 CHIPS법 자금 지원으로 얻는 일부 이점을 상쇄할 수 있음

〈표 V-2〉 2022년 이후 기업들의 FDI 발표 현황

산업	주요 투자 계획
반도체	삼성전자 2024년 4월 기준, 미국 텍사스주에 400억달러 이상 투자 예정 미국 CHIPS 및 과학법에 따라 최대 64억달러의 직접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
	SK하이닉스 2024년 8월 기준,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38억 7천만달러 투자 계획 CHIPS 및 과학법에 따라 최대 4억 5천만달러의 직접 자금 지원 대상
전기차 및 배터리	현대자동차그룹 2022년 5월 기준, 2025년까지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 예정 이 중 55억 4천만달러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시설 신설에 사용
	LG에너지솔루션 2023년 3월 기준, 미국 애리조나주에 55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북미 지역 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생산을 강화할 예정
	SK온·삼성SDI 미국 내 복수의 자동차 제작 업체와 합작투자를 진행 중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Table 2.

○ 세계 반도체 산업정책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장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경쟁업체들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여 미국 내 생산 확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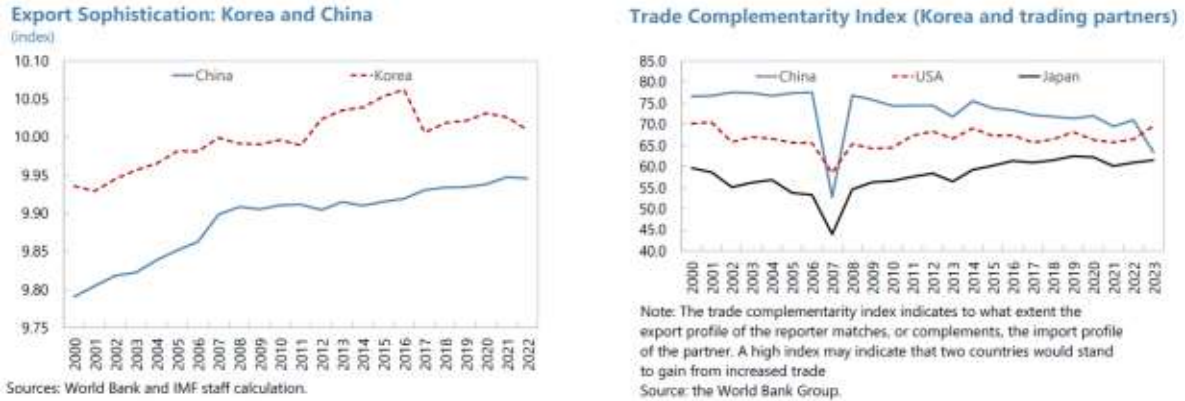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CHIPS 법 시행 이전에는 10%에 불과했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이 새로운 생산 설비 가동과 함께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반도체에 대한 미국 내 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포함한 비미국산 반도체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제조 시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가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반도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해 한국 반도체의 수출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일부 생산 이전은 해외 투자 증가를 통해 본원소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따라 국내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주요국들의 산업정책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한국의 핵심 수출 부문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산업정책이 생산 설비 확충과 혁신을 촉진해 품질과 물량 양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생산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중국은 자동차, 반도체, 친환경 기술 등 우선순위 산업에 집중된 보조금을 통해 자국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Rotunno and Ruta, 2024)
- 또한,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 고도화 격차가 줄어들면서 양국 산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그림 V-7])
-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역시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그림 V-7] 한국 및 중국의 수출

(단위: 지수)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7.

○ 한국은 K-Chips 법을 도입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2022년과 2023년 한국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국내의 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에 15%(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도입함
- K-Chips 법 제정 이후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2024년 5월에는 추가로 190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여기에 더해 경기도에 20년간 약 4,700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대규모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임
- 주요국의 정책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반도체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세계 산업정책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볼 수 있음

4. 정책

○ 산업정책은 외부효과나 시장 실패가 발생해 효과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그러한 경우에도 산업정책은 무역 및 투자 왜곡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의무와 일치해야 하며, 국내외 생산자 간 차별을 피해야 함
- 산업별 개입보다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평적(산업 중립적)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자원의 낭비 없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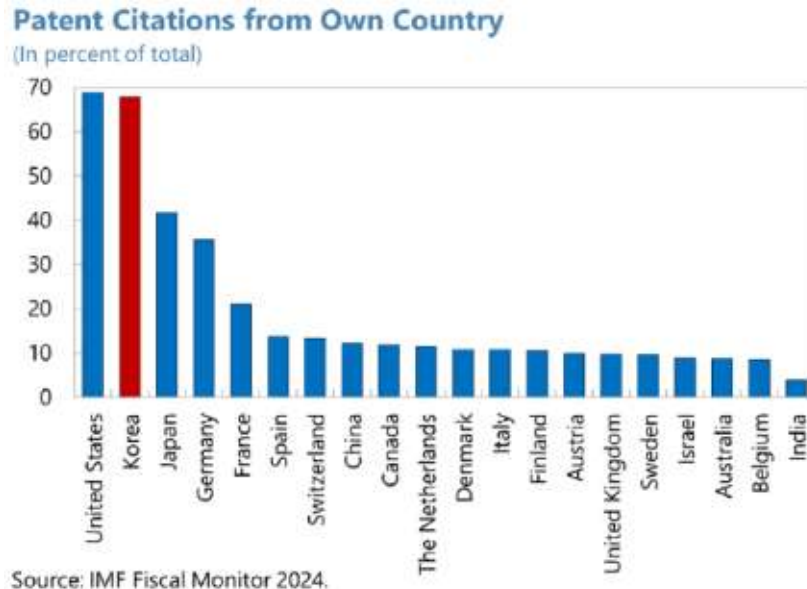
- 한국 당국은 일부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 **국제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함
- 한국은 국내 지식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혁신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그림 V-8)
- 혁신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재정 비용, 정책 목표, 설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수단들을 결합해야 함
- 전반적으로, 공공 연구, R&D 세액공제, 연구 보조금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꾸준히 평가되고 있음
 - 보조금은 스타트업에 더 유용할 수 있는 반면, 세액공제는 기존 기업들에 대해 관리 비용이 더 낮게 드는 경우가 많음
 - 세계 선도국들과 비교할 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 연구를 확대하는 것은 민간 R&D로 강한 파급효과 효과를 갖는 기초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실증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조합에 대한 지출을 GDP 대비 0.5%p 증가시킬 경우, GDP를 최대 2%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그림 V-8] 국내 지식 파급효과

(단위: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8.

○ 더 유연한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과 낮은 규제 부담은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전반적인 상품시장의 규제 강도는 개선되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무역 및 투자 장벽, 기업 운영에 대한 국가 개입, 서비스 분야의 장벽을 줄일 여지가 있음
- 규제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며 국제 무역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 기반 임금 체계를 장려하며, 직업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수출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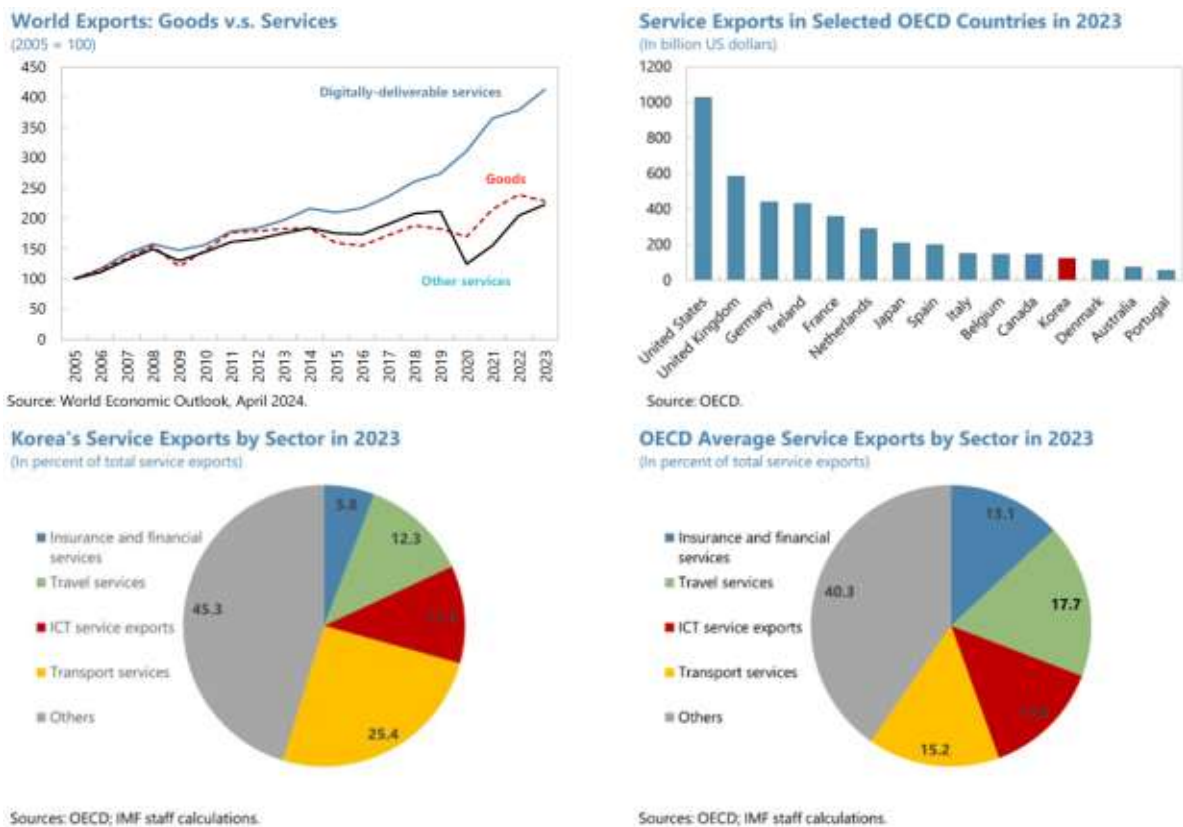
- 세계 상품 무역이 둔화된 반면, 서비스 무역(특히 디지털 서비스)은 가속화되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제조업 부문과 달리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작음
 - ICT, 관광, 보험 서비스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그림 V-9])

- 문화 콘텐츠, 제조 관련 서비스, 정보통신과 같이 대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핵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은 서비스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과 창업 비용을 낮추고 복잡한 인허가 요건을 단순화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된 병목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과, 문화적 영향력과 함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식음료 산업 역시 향후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임

[그림 V-9] 한국의 서비스 수출

(단위: 지수, 10억달러, %)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Selected Issues, 2025, Figure 9.

- **지리적·경제적 분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지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함**
 -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확대하여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것은 더 회복력 있는 무역망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존 무역 협정을 강화하고 신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민간 부문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며 잠재적인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을 높임
-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정책 로드맵과 FTA 확대,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는 당국의 노력을 환영함